

이명박은 반민주적 탄압 중단하라

정부는 저항이 두려워 경찰 폭력에 매달리고 있다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린 지난 5월 1일과 2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어떤 정부 비판·반대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권리는 짓밟혔다.

경찰은 3일 동안 무려 2백21명을 연행했다. 미성년의 여학생과 ‘하이스쿨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악단은 물론 구경하는 일본인 관광객까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행했다. 또 시위대에게 최루액, 고무 추출물 캡사이신을 뿌리며 곤봉을 휘둘러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피를 흘리고 팔이 부러지는 피해자가 속출했다.

숨 쉴 틈조차 허용 않는 이런 무지막지한 원천봉쇄 때문에 촛불 1년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하이스쿨페스티벌 무대에 올라가서 민주주의 파괴에 항의했던 것이고 일부는 돌을 던져서라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경찰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그만큼 저들이 저항을 두려워하고 겁 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MB 약법 통과 실패,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낙마, 한나라당의 4.29 재보선 참패 등으로 이명박은 더는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고조가 촛불 1주년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운동 활동가에 대한 무차별 소환, <PD수첩> 탄압 등을 지속해 왔다. 또 4월 28일 공안대책협의회와 5월 2일 법무부, 행안부 등의 답화문을 통해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협박했다. 5월 4일에는 낫과 망치 등을 휘두르며 용산 참사 현장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며 ‘총기 사용’ 위협까지 했다.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는 숨 막히는 폭력 탄압이 끝내 화물연대 광주시부 박종태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16면)

이명박은 앞으로도 탄압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사회적 불만을 물리적으로 억누르는 방법 말고 이명박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대규모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6명까지 연행했다.

사노련·실천연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 (관련기사 2면)

막가짜식

그러나 이명박의 온갖 탄압과 위축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세계노동절 집회에는 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학생·시민이 모여서 거리 행진까지 하며 자신감을 보여 줬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탄압에 맞서야 한다.

용산범대위 탄압, ‘상습시위꾼’ 무더기 소환, 촛불집회 참여자 대거 형사 처벌, 실천연대·한청 이적 단체 규정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이명박은 정신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마스크법’, ‘사이버 모욕죄’, 집단소송제, 국정원법 개악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MB약법을 또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은 이명박의 이 모든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서 공동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

탄압받는 개인들이 알아서 대응하거나 소환 등에 응하면서 자기 저하되도록 방치해서도, 정점별·사안별로 각개 대응해서도 안 된다.

단결된 힘으로 탄압받는 당사자들에게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며 일치된 대응을 모색해야 하고, 규탄과 항의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6월로 예정된 언론약법 등 MB약법 추진에도 잘 맞설 수 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경고한 ‘사회연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할 필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찰은 2백21명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연행했다.



전남도 기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5월 6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을 요약하면, 현재 25명인 지역 재건팀(PRT) 규모를 85명으로 늘리고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구급차 등 장비를 지원하고 태권도 훈련 센터, 병원 등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지원되는 예산은 3천만 달러에서 7천4백만 달러로 늘어났다.

비록 이번 지원 확대 방안에 재파병 내용이 빠졌지만 그렇다고 지원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애초 이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안정화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16일 오바마 정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 리처드 홀부룩이 방한해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요청했고, 4월 말에는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방미해 의견을 조율했다(〈한겨레〉 5월 4일치).

특히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과 대적점에 서게 될 현지 경찰 지원을 위해 전현직 경찰들을 파견하겠다는 것만 봐도 이 지원이 정확히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 재건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점령 지

원인 것이다.

둘째로 이번 지원 확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짙다. 이미 정부는 국방연구원에 “파병 문제를 집중 분석”한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 연구를 지시했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6월경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정부 관계자 스스로 “적당한 계기를 잡아 파병 문제를 논의에 부쳐야 할 때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 파병이 의료 부대에서 시작해 전투 병력이 포함된 자이툰 부대까지 나아갔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야말로 “돌아가는 사정이 뻔한” 것이다.(〈중앙일보〉) 보수 언론들은 벌써 이번 지원이 “재파병에 앞선… 단계적 지원”(〈동아일보〉)이고, “재파병 가능성이 미리 차단할 필요는 없다”(〈중앙일보〉)며 재파병 군물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비극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수도 카불을 제외한 거의 전 국토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다. 8년째 계속된 미국의 점령이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절망만 가져다 준 결과다.

더구나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파키스탄군은 파키스탄 북서변경주에서 탈레반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고, 미군 또한 그 주변에 수시로 무인폭격기를 띄워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 지역에는 난민이 1백만 명 넘게 존재한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모두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과 군사작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파병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민중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이 이뤄진다면, 지난 2007년 윤창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을 돕는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으로 평범한 한국인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 관련기사 8~9면

종합

세상을 보는 시각

“잠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게 있다. [고문 피해자를 처박은] 벽은 그리 딱딱하지 않았고, [고문 피해자의] 목 주변에 보호장치를 대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 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헤이든의 중요한 지적

“나도 대통령직 끝내면 녹색운동을 해야겠다”

－ 퇴임 후에도 ‘삽질’하겠다는 이명박

“어린이 여러분이 공부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 애들한테도 거짓말하는 이명박

“내게 4억 원은 큰 돈이 아니다”
－ 이명박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

“인터넷에 자살 충동 사이트까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 화물연대 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이명박

“[천정배는]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 새끼. 기본적으로 이걸[국회?] 없애 버려야 해”
－ 외교통상부장관 유영환

“외국인 흉내 내지 마라! XX새끼”
－ 촛불 1주년 때 ‘물지마 여행’ 된 일본인 관광객에게 경찰이 한 말

“그것은 액수를 반값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뜻이었다.”
－ 교육부 차관 이주호가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나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저를 버려야 한다”
－ 노무현, 우린 이미 버렸다

“이제 억압과 착취의 시절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
－ 부산 양산, 김해 지역 배전업자들이 건설노조를 겨냥해 실은 신문 광고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칼을 빼 들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이 다시금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꺼내들고 있다.

4월 30일 경찰은 사노련 웹사이트와 주요 활동가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이다.

5월 4일에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아주대 학생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중 한 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통일학술제전’에 선 군정지 관련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상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종각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

사진 이윤선

황에서 ‘친북’의 굴레를 씌워 마녀사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나 선군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녀사냥에는 반대해야 한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최근 수원의 한 촛불 시민을 구속한 것도 심상찮다. 함께 살던

실천연대 활동가의 컴퓨터와 자료들을 압수해 간 것을 볼 때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으로 연결할 듯하다.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저질 악법이다. 역대 정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특하면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명박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에 의존해 좌파를 속죄양 삼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맞서며 탄압받는 사람들을 방어해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왕의 친구’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으로 ‘왕의 친구’라는 천신일 관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대선 전 천신일이 이명박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을 만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천신일이 2007년 4월 온 가족이 주식을 팔아 49억 원을, 11월 또 한차례 주식 매매로 하루 만에 1백71억 원을 마련해 대선을 앞두고 총 2백20억 원의 현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 친이 쪽 재선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선거의 일등 공신은 천신일 회장이고, 그는 몸으로뿐 아니라 돈으로도 고생했다”며 “[그가] 사실상의 후원회장 구실을 했다”고 ‘증언’했다.

천신일은 이명박과 고려대 동기이자 ‘63동지회’ 동지로 심지어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 산 적



5월 5일 고려대

사진 임수현

정권 초기임에도 벌써 대통령의 형에, 친구까지 나서서 온갖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 있고 바로 지난해 여름휴가도 같이 간 ‘절친’이다.

천신일이 회장인 고려대 교우회는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까지 어겨가며 ‘멤버어천가’를 불러냈고 이 때문에 천신일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 모든 정황들은 ‘천신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천신일의 계좌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천신일이 박연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사과상자로 10억 원을 받고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의혹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 용인의 천신일 소유 땅을 통과하게 돼 있는 고압 송전선이 설계변경이 돼 우회했다는 특혜시비도 있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정권 초기임에도 벌써 대통령의 형에, 친구까지 나서서 온갖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천신일에 대

해 출국금지 조치 말고는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천신일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명박 당비 대납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했다. 검찰은 이미 BBK 때부터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며 권력의 심부름센터 구실만 해 왔다.

고려대 출신 대통령과 그 친구가 악행과 의혹으로 나라를 더럽히는 상황에서, 5월 5일 고려대 총학생회와 학생회, 학생 단체들은 천신일 비리 의혹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고려대 재단·교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려대 당국은 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총·부총학생회장을 폭행하는 등 이를 가로막기 급급했다.

학생들은 “노동자에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학생들에겐 높은 등록금과 청년실업을 안겨 주는 이명박이 선배라는 것도 부끄

러운데, 심지어 교우회장마저도 대형 의혹을 사고 있다”며 “고려대 학생으로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정태호 총학생회장은 “교우회에 대한 의혹 해명을 촉구하기는커녕 이를 위한 기자회견마저 가로막”은 “오늘은 고려대의 자유·정의·진리의 가치가 죽은 날”이라고 규탄했다.

최근 고려대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김지윤 씨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하자 교우회가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도를 짓’이라고 하더니 그것이 당비 대납인가?” 하고 꼬집었다.

이명박은 최근 박연차 수사를 두고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친인척뿐 아니라 친구까지 부패 의혹에 끼여든 현 정부야말로 청산 대상일 것이다.

이현주 기자 | hyunj43@left21.com

자살로 내몰면서 자살을 막겠다는 정부

올해 들어 벌써 강원도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실직과 구직난, 생활고에 시달리다 끝내는 죽음을 택한 사람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돼 강물에 몸을 던진 휴학생, 성적과 장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다.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사망 원인중 자살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0대의 사망 원인에서도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에만 전체 20대 사망자 중 37.5퍼센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더구나 이 통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 통계는 우리 나라에서 특히 청소년들과 ‘88만원 세대’가 느껴야 하는 소외감과 고통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나약함, 현실도피, 우울증, 충동적 성향, 모방심리 등에 있는 게 아니다.

피 말리는 경쟁을 강요하고 경쟁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며 어려서부터 서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짓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임을 가르치는 사회, 한 쪽에서는 수천~수만 명이 정리해고 되는데도 다른 한 쪽에서는 수십~수백조 원의 돈 잔치가 벌어지는 이 사회가 자살의 진정한 주범일 것이다.

자살용 물품(?)

따라서 경쟁에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면 자살이 일정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자살을 줄이려 한다. 강원도에서는 취약 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숙박업소 주인이나 연탄 등 자살용 물품(?) 판매점 주인들에게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 연탄을 사는 이유 등을 반드시 묻고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인터넷상의 자살관련 커뮤니티들이 자살을 조장하고 자살하는 법을 퍼뜨리고 자살하기 좋은 장소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한다. 자살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이버상의 사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살을 막아내지도 못할 ‘명박스러운’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김기철



경제

한국 경제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투기 조장과 거품 확대는 재앙을 부를 것

지난 3월 초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폭락하던 세계 주식 시장이 최근 다소간 회복하자,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월의 1천선에서 1천4백 정도로 40퍼센트가량 상승하고 1천6백 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이 1천2백 원 대로 떨어져 외환시장이 안정되자,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자 중국 경제와 밀접히 연결된 동아시아가 세계경제 악화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디커플링론’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디커플링’?
악화하던 경기 위기가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시장 개입으로 일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밑에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표가 훨씬 많다. 우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서유럽 국가들의 개입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동유럽에서 금융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동유럽은 2000년대에 미국·영국과 함께 외국에서 빚을 내 경제를 성장시킨 지역이다. 동유럽은 특히 인근 유럽 국가에서 많은 돈을 빌려 왔는데, 그 금액이 보통 GDP의 몇 곱절이나 된다. 그래서 미국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에는 몇몇 동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위기설이 상당히 진정됐는데도, 발트3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여전히 높고 불가리아는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동유럽 중 상대적으로 낫다는 폴란드는 최근 IMF에 2백억 달러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동유럽 경제의 불안정 때문에 서유럽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유럽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으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2010년 영국을 제외한 유럽 은행들의 부실 예상액은 1조



사진 출처: 청와대

자전거 도로 확대라는 또 다른 건설 경기 부양을 내놓은 이명박 정부. 거품 확대는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다.

1천1백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보다 금융 시장의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막대한 차입으로 과생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큰 이익을 얻었던 영국 경제도 위기가 심각하다. 영국은 재정적자가 너무 많아 국제 발행에 실패했는가 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만 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의 은행들은 외채의 25퍼센트가량(2008년 하반기)이 영국 자금일 정도로 서유럽 은행들로부터 차입이 많다. 서유럽에서 금융 위기가 심화하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이 뻔해 다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미국의 금융 위기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주요 은행인 씨티은행

과 BoA가 이익을 났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손실을 줄여서 반영하는 새로운 회계기법 덕분이다. 미국 은행들의 부실 정도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설혹 괜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집값도 계속 하락해 모기지 대출 부실이 여전하다. 여기에 상업 모기지, 신용카드, 기업 대출로 부실이 확대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IMF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손실 총액을 2조 7천억 달러로, 전 세계 예상 손실규모를 4조 1천억 달러로 늘려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손실 예상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위기가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크라이슬러와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 GM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계속 높아지는 실업률을 더욱 높여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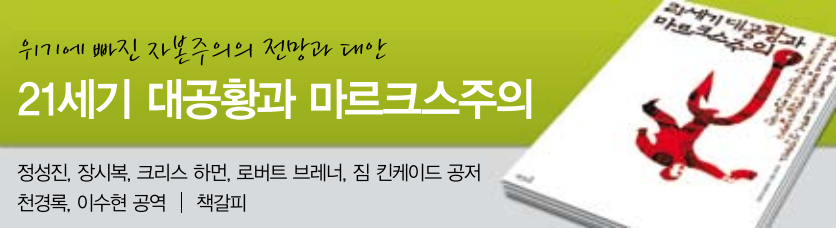
투기적 ‘핫머니’
한편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중국 은행들에 압력을 넣어 올해 1사분기에만 신규 대출을 무려 4조 5천억 위안 늘렸다. 그래서 소비와 생산이 늘면서 올해 8퍼센트 성장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줄어드는 수출을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개입으로 만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경쟁적으로 산업 투자에 뛰어들면서 무계획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 등에 중복 투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생산이 늘고 있지만, 이런 과잉생산 증가로 재고가 증가하고 덤핑 판매가 늘어나면 중국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한국도 3월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지만,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의 내용을 보면, 선박 수출만 증가했을 뿐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은 30~40퍼센트나 감소할 정도로 더 악화했다. 게다가 선박 수출은 2~3년 전 수준가 지금 통계에 잡히는 것인데, 우리 나라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는 고작 1건이다. 수입의 내용도 나쁘데, 3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30퍼센트와 40퍼센트 감소해 신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래서 올해 1~2월 중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IMF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64.1퍼센트에 그쳤고, 공식 실업자 수는

곧 1백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반면, 한국의 은행권 부실 채권은 20조 원에 이르러 5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주가가 대폭 오르고 환율이 떨어진 것은 지난 두 달간 해외 자금 5조 원이 한국 주식시장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금 중 4분의 3이 바하마, 버뮤다, 버진제도 등 조세회피지나 조세회피지로 간주되는 곳에서 들어왔다. 즉 투기적 ‘핫머니’다. 투기 자금들은 금융 위기가 상대적으로 진정되자 다시 전 세계를 누비며 단기 이익을 노리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한국에 쌓여 있는 8백조 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식·부동산 시장의 반짝 상승이 경기 회복을 보여 준다면, 4월 말에 통과된 추경 28조 4천억 원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공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1930~1932년에도 증시는 세 차례에 걸쳐 20퍼센트 이상 상승한 적이 있다. 현재도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이것은 앞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저질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거품 확대, 부자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는 한국 경제의 운신의 폭을 더욱 줄일 것이다. IMF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재정적자 확대폭이 가장 크다고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세제 개혁과 복지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

재벌·부자를 권력의 사회적 기반으로 해서 자유시장주의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가 그럴 의사가 없다면,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투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강동훈 기자 | kah@left21.com



1990년대 일본 경제 불황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교훈

1990년대 일본 경제 위기가 가져온 타격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일본은 35년 만에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 3월까지 -3.1퍼센트 수축할 거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0년대 불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다. 1990년대 불황으로 수많은 일본인들의 삶이 파괴됐다. 예컨대, 1990~2003년에 남성 자살률이 갑절로 늘었다. 현재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해, 상당수 전문가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세계경제가 1990년대 일본 불황 정도로만 악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 세계 위기와 1990년대 일본 위기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당시 일본 불황은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1986~1989년에 부동산과 주식이 두 배나 올랐다. 기업들은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 주가

를 올리고, 복잡한 금융 기법을 활용한 투기 활동을 벌였다. [불황 이전] 일본 경제는 연평균 5퍼센트 성장했고, 일본 자본가들은 공장과 기계에 신규 투자했다. 그런데 1990년 도쿄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1990년대 동안 일본 경제는 해마다 간신히 1퍼센트 성장했다. 주류 논평가들은 당시 일본의 문제가 금융 투기와 부동산 가격 인상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실물 경제와는 상관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일본은 1970년대 초 이후로 전 세계적 이윤율 하락 경향의 영향을 받아 왔다. 심지어 일본 경제 호황이 절정에 도달했던 1980년대 말에도 제조업 이윤율은 1965~1970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본 경제는 주로 미국 시장에 자동차와 기타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성장했다. 따라서 일본 지배계급은 엔-달러 환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이자율도 낮은 수준

에 고정시켰다. 낮은 이자율로 투자를 노린 대출이 급증해 거품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수는 없었다. 이 문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던 일본 은행, 기업, 지방 정부 등이 은폐한 대규모 부채 문제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가 영국 은행을 구제한 것처럼, 일본 중앙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인수했다. 그 결과 일본 국가 채무 규모는 GDP의 갑절이 넘는다. **저항 약하면 ‘잃어버린 10년’ 될 수도** 또, 일본 지배자들은 요즘 유행하는 “양적 완화”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당시 불황으로 디플레이가 발생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보통 일본인들은 경제 회복에 필요한 만큼 소비할 수 없었다.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였다. 따라서 원래 채무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상환하면 됐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조치조차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일본 정책 입안자의 불황 대책은 주류 경제학의 파산을 보여 줬다. 일본이 호황일 때 일본 경제 관료들은 천재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거품이 꺼진 후에는 바로 취급받았다. 당시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들이 오늘날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1990년대 일본의 실업률이 6퍼센트 이하였다고 지적하며, 당시 상황이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전 40년 동안 일본의 평균 실업률이 1~2퍼센트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본 지배계급은 불황에 대응해 전후 호황에서 형성된 종신 고용 체제와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 체제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변했다.

오늘날, 일본인의 15.3퍼센트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한때 일본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현상이다. 또,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임시계약직으로 한 달 수입이 5백 파운드(약 1백 20만 원)가 채 되지 않는다. 전후 호황의 유산으로 아직 상당한 사회안전망이 존재했고 수출을 통해 최악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건만, 이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이미 신자유주의의 가혹한 공격을 경험한 사회들은 심각한 전 세계경제 위기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1990년대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만약 우리가 강력한 노동계급 저항을 조직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10년, 혹은 그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미 앨런슨
출처 영국반자본주의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번역 김용욱 기자

경제

이중의 위기에 빠진 중국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 덕분에 중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열린 G20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말해 주는 것처럼, 중국이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6.8퍼센트를 기록해 텐안면 항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중국 해관(海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올 1분기 수출은 20퍼센트 하락했고 수입은 30.7퍼센트 하락했다.

수출입뿐 아니라 국내 생산에서도 경기 침체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0퍼센트 이하면 긴축성장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50퍼센트 이하를 맴돌고 있다. 산업생산은 2008년에 증가율이 급감했고, 올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생산은 1997년 이래 최저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예측가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5~7퍼센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투자는형 모건스탠리는 올해 중국 경제가 5.5퍼센트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8퍼센트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급격한 경기위축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꼈고, 지난해 11월 5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2007년 중국 GDP가 25조 위안인 점을 고려하면 4조 위안은 GDP의 16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바오펑장(保增長, 전면적인 경제성장 추진)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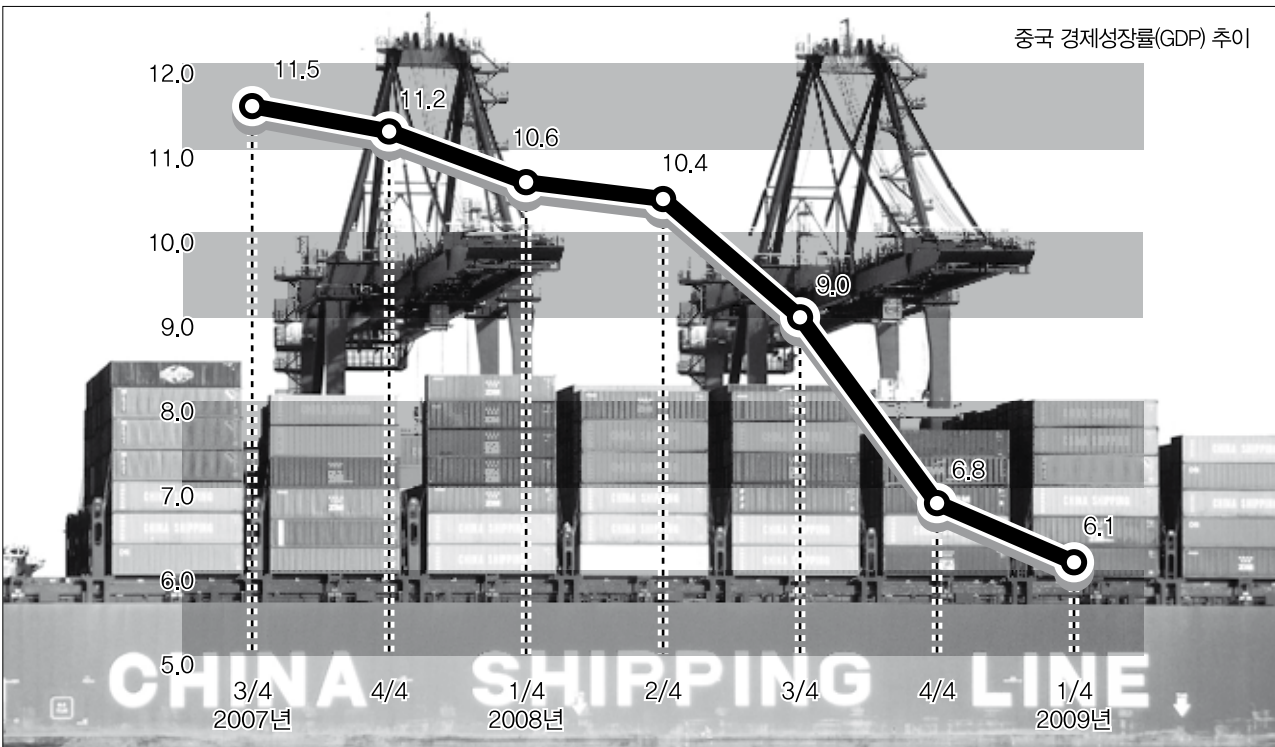
이번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이 2009~2010년 2년간의 정책이라는 점,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중복한 점,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됐지만 급격히 추락하던 중국 경제에 부분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남방항공 같은 대형 국유기업의 부실을 세금 감면이나 공적자금 공급으로 메워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수출 보조금 확대, 각종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중이며, 농촌 빈곤층에게 1인당 1천2백 위안(24만 원가량)을 보조하는 것을 포함한 사회적 지출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기부양책이 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약간 완화할 수 있을지언정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기는 8퍼센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기업의 이윤율 증가에서 비롯한 것이고, 투자수익률은 16~18퍼센트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산웨이장(Shan Weijian) 같은 학자는 세계은행의 수익성 추계치는 자본소득 같은 요소를 이윤에 포함시켜 이윤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기업의 이윤 마진이 2000년대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들은 받아야 할 여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벌충하기 위해 내수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TV, 에어컨 등 각종 전자제품 생산시설들이 수요에 비해 네 배 이상이나 돼, 과잉축적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월 1일 상하이 훙코우 경기장에서 열린 직업 박람회의 구직자 대열

국유기업 부실과 국유기업에게 대출해 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도 “중국 GDP 성장에서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GDP의 50퍼센트 정도가 고정자본투자에 들어가고 연간 고정자본형성이 30퍼센트에 이르는데도 전체 경제가 10퍼센트 이상 성장할 수 없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는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폴 크루그먼이 총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은 점 때문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경고를 연상시킨다.

2003년 이래로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산웨이장이나 스티븐 로치의 지적은,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윤율의 하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지속된 과잉투자로 인한 수익성 하락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때문에 좀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둘째는 중국 경제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이 이번 위기로 심각한 모순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래로 중국은 수출을 위한 제조업 생산이 국내 소비를 위한 생산의 2.4배나 많을 정도로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다.

중국의 수출입 제품의 구성도 저기술 제품 비중은 줄어두고 하이테크 제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바뀌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표현은 중국이 농업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의 개도국으로 변모했다는 의미보다는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적 생산

연관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중간고리 구실을 하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용어가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지로서 중국을 선택해 생산시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199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를 나타내 준다. 또 아시아개발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수출품의 61.3퍼센트가 서방 선진국으로 향하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서방(특히 미국) 소비시장에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대신 그 흑자 자금으로 선진국의 국제나 채권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는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 대신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로 서방 국가들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자, 중국과 한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 주로 수출하던 국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급격히 하락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벌충하기 위해 내수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TV, 에어컨 등 각종 전자제품 생산시설들이 수요에 비해 네 배 이상이나 돼, 과잉축적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5년 중국 상무부는 6백 개 소비재 중 70퍼센트 이상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재 수요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같은 민간소비 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GDP에서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장개혁이 추진되면서 증대된 빈부격차와 이번 경제 위기가 결합되면서 중국 사회는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3퍼센트에서 2006년 40퍼센트 이하로 하락했고, 민간 소비도 같은 시기에 47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하락했다.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이나 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대중 소비사회가 아니다. 더욱이 중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시장개혁은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켜 부자들은 더 늘어났지만 대중 소비를 향유할 계층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의 민간소비 확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경제 위기에 직면해 중국 경제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서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우징리엔,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 린이푸 등이 그런 주장을 한다. 하지만 중국 성장전략을 급격히 변경하는 것은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산업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지배계급 내 치열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불안정과 격랑의 중심

현재 중국 경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과잉축적의 모순과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본 가치의 파괴가 일어나고 선진국 소비 축소로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며 호황기에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

경제 위기는 노동 대중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이미 농민공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농촌으로 되돌아갔다. 착취에 기초한 축적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고 있는 노동대중을 고려해 노동계약법이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 효과는 일부에 한정되고 있다. 시장개혁이 추진되면서 증대된 빈부격차와 이번 경제 위기가 결합되면서 중국 사회는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중국 지배자 중 일부는 이번 경제 위기를 세계 열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듯하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전략자원 확보, 외환보유고의 정치적 활용 등이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중국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이 IMF의 특별한 출권(SDR)을 기축통화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오바니 아리기(G. Arrighi)처럼 이제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 경제와 그 정치적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점과 향후 중국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의 구원자로서 중국의 구실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경제 위기의 구원자 구실보다는 추락하는 이윤율, 수출 모델의 위기, 내부적으로 첨예해지는 계급 갈등 때문에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적으로도 세계 지배 구도에 진입하려는 시도 때문에 불안정과 격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정구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구매자관리지수(PMI)

특정기업이나 업종의 경기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 이용하는 지표. 기업활동, 신규사업, 고용, 투입물가격, 판매가격, 산업전망 등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 산출된다.

돼지독감

이윤 중심 체제가 인플루엔자의 위협을 키웠다

《조류독감》(돌베개)에서 세계적인 조류 독감 유행을 경고했던 **마이크 데이비스**가 세계화한 농업이 어떻게 돼지독감 발병 환경을 조성했는지 설명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교수/ 정치 활동가이자 도시 이론가이다. 김용욱 기자가 번역했다.

멕시코 돼지독감으로 전 세계가 갑자기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유전적 괴물은 아마도 양돈 산업의 배설물 늪에서 태어난 듯하다. 북미의 초기 확산 과정을 보면, 감염률이 1968년 홍콩인플루엔자 때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독감은 돌연변이 H5N1, 즉 조류독감으로 알려진 우리의 ‘공식’ 살인마 대신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장은 2003년 사스보다 덜 위험한 듯 보인다. 그러나 사스보다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

매년 A형 인플루엔자로 1백만 명이 죽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병독성이 조금만 높아지고 특히 높은 발병률과 결합되면 큰 전쟁에 버금가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한편, 최초 전염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랫동안 선전한 논리, 즉 지역 공중보건의 질에 상관 없이 단순히 의약 관료들이 제때 대응하기만 하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의 희생자들이다.

1997년 홍콩에서 최초로 H5N1 사망자가 발생한 뒤 WHO는 일관된 전략을 고수했다.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전염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확인·분리해 주민들에게 항바이러스 약물이나 가능한 경우 백신을 쏟아붓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 소탕 작전’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다. 미생물은 WHO나 정부 관리들이 전염병의 최초 발생지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전 세계를 이동하고 (조류독감의 경우에는 날아다니고) 있다. 또, 인간과 동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감시는 거의 하지 않거나 초보 단계다.

대규모 투자 없이 위기 관리 불가능해

그러나 [WHO와 정부가] 조류독감에 대담하고 신속하게 돈 들이지 않고 대응했다는 신화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부자 나라 정부에게 유용한 선전도구였다. 이 정부들은 해외 전염병 최전선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보다 제 나라 안에 마지노선을 설치하는 데 더 관



더워진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고 명동 거리에 나온 사람들 — 앞으로 이런 광경을 더 자주 보게 될 듯하다.

사진 이미지

심이 있었다. 이는 이 나라의 대형 제약 사들에게도 유리한 것이었다. 대형 제약사들은 로슈 사의 타미플루처럼 중요한 항바이러스 약품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해 달라는 제3세계의 요구와 전쟁을 벌여 왔다.

감독, 과학과 규제 인프라, 기초 공공의료 구축, 필수약품의 전 세계 보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 없이 WHO나 정부 방역 당국 수준에서 돼지독감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AIG의 파생상품, 매도프의 증권 사기 같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전염병 경고 체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미와 유럽연합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가 가축병과 그것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능력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은 놀랍지 않다. 미국도 별로 다르지 않다. 감시 체계는 주 관할권을 따라 파편화해 있고, 기업들은 보건 규제 조항을 자신의 종업원이나 가축처럼 경멸한다.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경고해 왔지만 [미국 정부는] 전염병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바이러스 분석 기술을 전수하기를 꺼렸다. 멕시코에는 저명한 질병 전문가가 있지만,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확인하려면 샘플을 미국 위니펙그(이곳의 인구는 멕시코 시 인구의 3퍼센트도 안 된다)에 보내야 한다. 일주일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굵은 것은 애크랜타에 위치한 ‘전설적 질병 관리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비교는 말]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CDC는 멕시코 정부가 긴급 조치를 발동한 지 6일 뒤에야 돼지독감 발병 사실을 알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돼지독감 발병이 확인된 지 2주가 지났을 때도 미국 공중보건 관리들 대다수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고 폭로했다.

초대형 배설물 지옥으로 변한 돼지 사육장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 이번 돼지독감 발병의 특징은 예상 밖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히 예견됐다는 것이다.

6년 전, 과학 잡지 《사이언스》는 “오랜 안정 뒤, 북미의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H1N1 돼지독감 유전자는 대공황기 초기에 확인된 뒤로 원형에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8년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공장형 돼지 농장에서 대단히 병원성이 높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암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해마다 더 전염성이 강한 변형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는 H3N2 바이러스에 있는 유전자 일부를 갖게 된 변형 H1N1 바이러스도 있었다(H3N2는 사람에게

독감을 일으키는 A형 인플루엔자다).

《사이언스》가 인터뷰한 연구자들은 그 잡종 중 하나가 인간에게 독감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로 1957년과 1968년에 발생한 전염병 대유행은 조류·인간 바이러스가 돼지 몸속에서 섞이면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돼지독감 공식 감시 기구를 건설하라고 제안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생화학테러에 대한 종말론적 환상에 사로잡혀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면서도 임박한 위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돼지독감 바이러스의 진화를 촉진했을까? 아마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번식한 원인과 같을 것이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남중국의 집약 농업 시스템 — 쌀, 물고기, 돼지, 가금류와 야생조류로 구성된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생태적 조건 — 이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돌연변이의 엔진이라고 여겨 왔다.

그러나 가축 생산의 기업화·산업화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진화에서 중국이 누린 독점적 지위가 종식됐다. 많은 이가 지적했듯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동물 농업은 교과서에 묘사된 목가적 가축 농장보다는 석유화학 산업과 더 비슷해졌다.

예컨대, 1965년 미국에서는 1백만 개가 넘는 농장에서 돼지 5천3백만 마리를 사육했다. 오늘날에는 사육장 6만 5천 개에 돼지 6천5백만 마리가 있고, 그 돼지 중 절반은 5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초대형 사육장에 몰려 있다.

이것은 구식 돼지우리가, 면역체계가 약해진 가축 수만 마리, 심지어 수십만 마리를 모아 놓은, 자연사에서 유례가 없는 초대형 배설물 지옥으로 변화한 것을 뜻한다. 이 지옥에서 가축들은 열과 비료에 노출되고, 다른 가축·자손들과 정신없이 병원균을 교환한다.

‘공룡 기업’들이 독감 역학조사를 가로막다

유타 주의 밀포드에서 스미스필드 식품의 자회사는 해마다 돼지 1백만 마리 이상을 생산하면서 저수지 수백 개를 독성 배설물로 가득 채운다. 자동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 본 사람들은 농업 기업이 자연법칙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지난해 퓨 연구소가 저명인사들을 모아 구성한 위원회는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산업식 동물 생산은 큰 위협을 낳을 수 있다. 즉, 많은 수가 집중된 동물 무리에서 바이러스가 끝없이 순환하면서 돌연변이와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커진다. 그 결과 인간 대 인간 전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또, 이 위원회는 돼지 공장에서 항생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하수시

설을 만들거나 인간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싸다) 돼지들이 내성을 가진 포도상구균에 감염됐고, 하수가 넘치면서 대장균과 피스테리아(캐롤라이나 하구에서 물고기를 10억 마리 이상 죽이고 어민 수십 명을 병들게 한 공포의 원생생물)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원균이 득실대는 이런 신종 생태계의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스미스필드 식품(돼지고기와 쇠고기)이나 타이슨푸드(닭고기) 같은 공룡 기업의 힘과 대결해야 한다. 이 위원회 의장은 전 텍사스 주지사 존 갈린이었었는데, 그는 기업들이 산학협동 연구 프로그램에 속한 연구자들의 연구비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등 조사를 체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했다.

더구나, 농업 공룡 기업들은 매우 국제화한 산업으로, 정치적으로도 세계

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타이의 대형 닭고기 회사인 CP그룹은 동남아시아의 조류독감 확산에서 자사가 한 구실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따라서 돼지독감 역학조사는 돼지고기 산업의 철옹성에 부딪힐 확률이 크다.

물론, 원인을 결코 찾아낼 수 없을 거란 말은 아니다. 이미 멕시코 언론은 베라크루스 주(州)에 위치한 스미스필드 자회사의 대형 공장이 발생지라는 소문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H5N1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WHO 전염병 전략의 실패, 세계 공중보건 수준의 지속적 하락, 필수약품에 대한 대형 제약사들의 철저한 통제, 생태 균형을 파괴하는 산업형 가축 생산이 전 세계에 불러올 수 있는 재앙 말이다.

감독, 과학과 규제 인프라, 기초 공공의료 구축, 필수약품의 전세계 보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 없이 WHO나 정부 당국 수준에서 돼지인플루엔자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다단계 금융 사기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정치

4·29 재보선 이후

저항의 자신감을 키운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

이명박 정부는 집권당 참패·진보정당 약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4·29 재보선 바로 다음날,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소환해 한나라당 참패를 덮고 민주당 지지자들(지난해 촛불시위 참가자의 일부를 이뤘을)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다른 한편, 4·29 재보선 결과에 사기가 오른 진보 진영을 탄압하느라 혈안이 됐다. 세계노동절·촛불1년 행사를 모두 원천봉쇄했고, 나흘동안 시위참가자들을 무려 2백21명이나 검거했다.

그러나 이런 핏수와 탄압으로 위기를 덮을 수는 없다. 재보선 다음날인 4월 30일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5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나마 있던 ‘고정지지층 30퍼센트’ 기반도 줄어든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71퍼센트)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크게 뛰어 올랐다. 정부는 5월 1~2일 무지막지한 탄압을 했지만 시위대의 행진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없었다.

청와대는 “지역선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나라당도 선거 패배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암을 발견하고도, 수술중 사망할까 봐 놀라서 덮는 비극적 상황”(남경필)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명박의 경쟁자인 박근혜의 입김도 더 커졌다.

촛불시위, 용산참사 항의투쟁, MB악법 통과 저지 투쟁, 신영철 법관 파문에 이어 재보선 참패까지, 결국 이명박은 불

결국 이명박은 불도저의 시동을 걸려고 할 때마다 키도 제대로 켜지 못했다. 이럴 때일수록 탄압을 극도로 밀어붙여 정국을 돌파하려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이 단결해서 이명박에 맞서며 민주당과 독립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울산 재선거

사진 제공 울산노동뉴스

도저의 시동을 걸려고 할 때마다 키도 제대로 켜지 못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명박은 탄압을 극도로 밀어붙여 정국을 돌파하려 할 것이다.

노동자와 잠재적 촛불 지지자들이 이런 광기어린 탄압과 경제 위기로 인한 불안정한 삶 때문에 사기저하와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된 좌파가 주도력을 발휘해 탄압 국면을 뚫고 나가야 한다.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 사퇴, 김상곤 교육감 당선, 4·29 재보선에서 진보정당들의 승리는 좌파의 조직된 대응이 낳은 쾌거다. 앞으로도 노동자 대중의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보 진영은 돌파구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진보 진영의 발목을 잡을 것

이번 선거의 백미는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연합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민주당까지 포함한 전략적 ‘반 MB연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두고도 민주대연합의 성과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고, 부평 재보선에서도 진보 진영 일각에서 민주당 당선을 위해 민주노동당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자신이 말했듯, 노무현과 민주당은 “이미 민주주의·진보·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

렸다.” 이런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이명박에 맞선 진정한 대안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반이명박 정서가 워낙 강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당선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개혁 염원 대중의 신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깃발만 쏘면 당선”한다는 광주와 전라도에서 민주노동당이 두 곳이나 당선하는 ‘이번’이 벌어졌다.

실사 민주당과의 연합이 선거 득표나 당선에 도움이 된다 해도, 진보세력은 진보의 핵심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 개입으로 김상

곤 선분이 선거운동 초기에 “교육은 경영”이라는 두루뭉술한 구호를 채택했던 것처럼 말이다.

민주당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진보세력과 민주당이] 한미FTA와 같은 갈등 이슈들을 정리하고 복지사회와 같은 기본 가치와 전망에 합의”(정성호,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해야 한다는 류의 압력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입증된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신자유주의 지지세력에 발목잡혀 반신자유주의적 주장을 과감히 하지 못한다면 진보세력 당선과 의회 진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울산 북구 재선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는 문제였는가

4·29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울 들어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실제 두당이 단결한 덕분에 “단일화 과정에서 확인한 양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이전에 울산에서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지지를 얻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 정당들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민주연합론’)이 틀렸음을 보여 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우파적 대안으로 부상하는 반면, 진보적 대안은 부재하다는 사실에 응답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진보정당의 선거적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동시에, 울산 북구 재선거 결과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물론 선거 승리로 두당이 바로 조직 재통합을 향해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노회찬 대표는 선거 직후에 “양당의 골이 더 깊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며, “문제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상황 파악을 한 성과도 있다”고 밝혔다. 두당의 연대 가능성과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두 진보 정당의 단결과 연대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손호철 교수가 그 중 하나다.

손 교수는 후보 단일화 덕분에 조승수 후보가 당선했음을 인정하면서도 “MB 심판이 중요하고 원내 진입이 중요하지만 분당의 원인이었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변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는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레디앙) 4월 30일치)

종파주의는 진보 진영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을 뿐

손 교수가 보기에 울산 북구 선거 결과는 “낡은 것은 죽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혼돈 상태”다. 이때 “낡은 것”은 “종북적인” 민주노동당”이거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이라는 대립 구도”다.((프레시안) 5월 4일치)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이라는 대립 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낡은 것”으로 비쳤다. 울산 북구 유권자들은 양당의 “대립”보다는 한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단일한 진보 후보(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를 요구했다.

이런 대중의 압력 때문에 지난해 민주노동당의 분리를 주도한 조승수 후보(조

후보는 당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모욕적이고도 고약한 용어인 ‘종북주의’를 유포한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 운동중에도 <조선일보>와 또다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반면, 김창현 후보는 인터뷰만이 아니라 사진 촬영도 거부했다.)와 그 대처점에 서 있던 김창현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둘이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챙겼을 것이다.

따라서 조승수·김창현 두 후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이를 두고 “혼란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손 교수가 어리석은 것이다.

손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진보신당이 “종북적인”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국사회당,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준비모임 등 진보 진영의 ‘좌파세력’”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 같다.((레디앙) 4월 30일치)

손 교수는 민주노동당을 거침없이 “종북적”이라고 낙인찍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지난해 발간한 자서전에서 부정한 규정이다.

“나는 대선 참패의 핵심 원인을 ‘종북주의’에서 찾는 견해와는 선을 그었다. ‘종북주의’란 용어가 애초 수구 보수의

무기였다는 점도 개운치 않을 뿐더러” “‘종북주의’를 근본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구태의연한 NL, PD 대결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심상정, <당당한 아름다움>, 레디앙, 202~203쪽) 심 전 대표가 분당 논쟁 당시에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실제 손 교수는 NL에 반대하는 범PD연합을 요구하는 것 같다. 물론 진보 진영은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 광범하게 단결해야 한다. 이때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는 것은 단결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되면 단결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4·29 재보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민주노동당은 13.3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3.5퍼센트)의 지지율을 합하면 민주당(16.7퍼센트)보다 높다. 이런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진보 진영의 연대(즉, 범PD연합)는 대중에게 이명박 정권에 맞선 실질적이고 유효한 대안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민주노동당 내부에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분리를 주도한 인물들 선거에서 지지해야만 했던 정치적이거나 그로 인한 씁쓸한 심정은 총

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박승흡 전 대변인이 “조승수 후보가 ‘진보정당 단일후보’라는 데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다. 김창현 후보의 승복 결정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선거연합만 고집한다는 인상을 당 외부에 심어 줄 뿐이다.

사실 박 전 대변인의 태도는 일관성도 없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당시 비대위 대변인이었던 박 전 대변인은 교양덕양갑 선거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노동당 최영희 후보가 맞대결하는 상황을 반대한 바 있다. “진보 정치인끼리의 경쟁”이 아닌 이명박 정부와의 대결”을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왜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가.

울산 북구 선거 결과는 진보 정당의 단결을 염원하는 대중 정서를 언뜻 보여 줬다. 그렇다고 두당이 앞으로 선거연합이나 (훨씬 가능성이 적지만) 조직 재통합을 향해 순항하리라고 예측하기에는 선부른 것 같다. 그러나 진보 정당의 단결에 대한 대중 요구를 외면하는 종파주의는, 조금씩 그 조짐을 보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진보적 도전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김인식 | kis@left21.com

경제 위기와 복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장호중 기자 rednuc@left21.com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성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사회연대전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연대선언은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을 보여 주는 것이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투쟁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 등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보다 나아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연대총파업”을 경고하며 사회연대전략이 단순한 정책 묶음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옹게도 임성규 위원장은 사회연대선언 발표 하루 전 <노동과 세계> 인터뷰에서 “정규직 양보론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하며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양보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규직 양보론은 정규직이 사용자에게(비정규직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므로, 임 위원장의 이 주장은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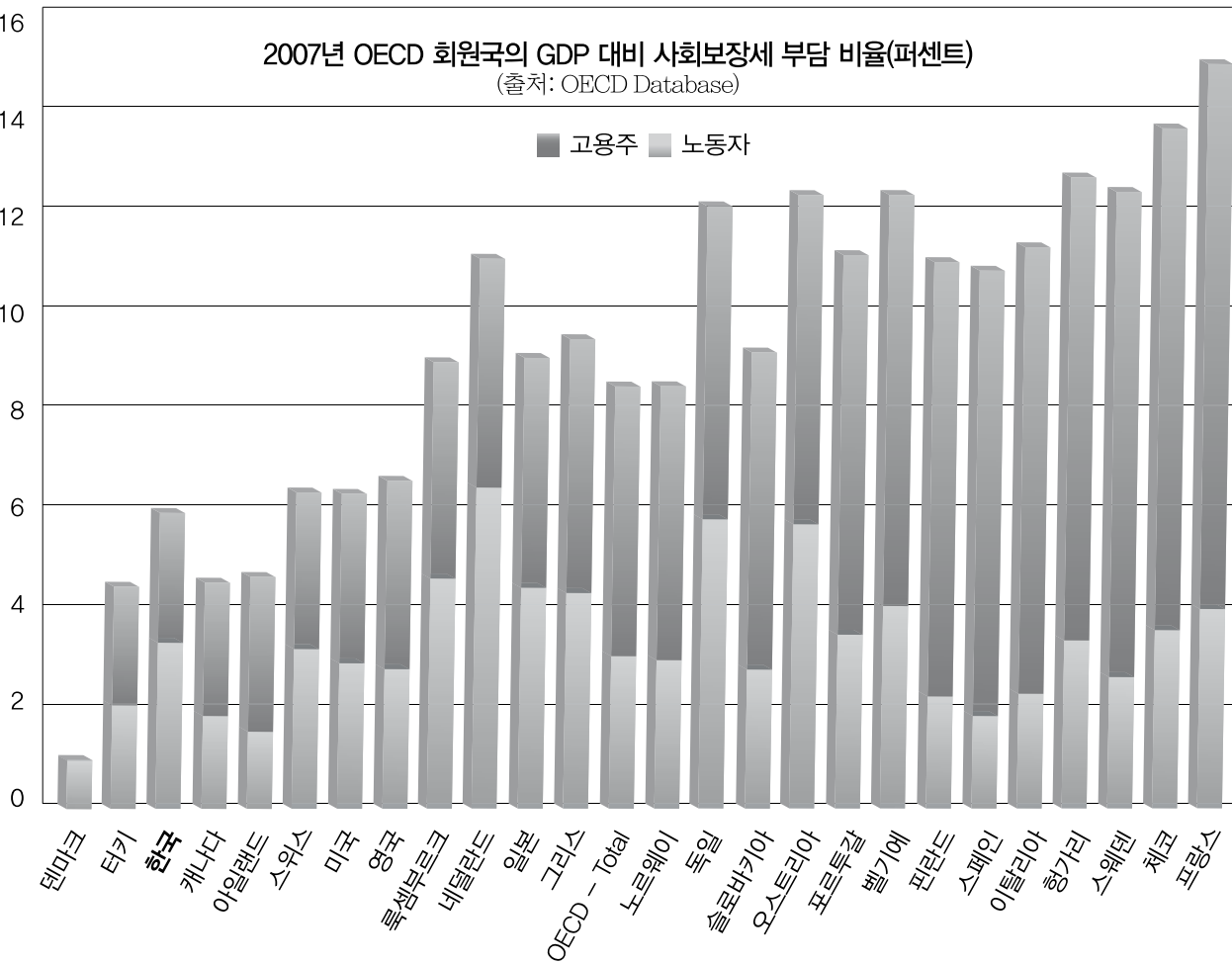
복지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어

그러나 임성규 위원장이 <노동과 세계>와 인터뷰한 내용에는 다소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다. 정규직의 ‘일방적’ 양보에는 반대하지만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4천8백만 민중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회복지제도가 같이 진행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 내 임금인상 요구를 낮추거나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일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에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은 핵심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주·부자의 부담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비해 복지 재정 마련에 더 기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기업주·부자가 독점한 어마어마한 부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투자될 때어야 이런 기여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복지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 한국의 복지 수준이 낮은 핵심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주·부자의 부담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임금(복지)을 늘리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장임금(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안에

도 나와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기업주·부자에게 감면해 주기로 한 세금만 거둬도 어지간한 복지 확대를 당장 실시할 수 있다. “갈 곳이 없어 은행에 잠자고 있는 부자들의 돈 8백조 원”(119주년 세계노동절 사회연대선언)을 꺼내 쓰면 임금과 복지 모두 늘릴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낮은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민주노총도 똑같은 근거를 들며 정부에 복지를 책임지라고 요구해 왔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은 정규직 양보론에 한 쪽 문을 열어 두는 약점을 계속 안고 가선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분명한 초점을 맞춰 양보를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어떻게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사회연대전략의 기본 취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다. 실질적 복지 확대는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 두루 이익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물질적·정서적 분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재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부와 기업주들의 손아귀에서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제기한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의 양보로 일부 재원을 마련하면 기업주들과 정부에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라고 할 명분과 압력이 생긴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를 통해 진정성을 보인 민주노총을 믿고 기업주와 정부를 상대로 함께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연대 속에서 ‘공통의 경험’을 통해 ‘연대의식’이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시나리오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뿐 아니라 정부도 나름의 시나리오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간질시켜 각개격파하기’다.

양보할 생각 없는 이명박과 기업주

노동자들 사이의,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절이 깊어지는 것이 단지 그들의 경제적 조건 즉, 소득 수준이나 노동조건

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정규직 책임론을 유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목하도록 조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유포한 ‘상식’이 노동자들 대부분의 의식에 막대한 적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관되게 이런 ‘분열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손쉽게 회피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임성규 위원장처럼 정규직 양보론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확대를 위해 정규직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오히려 ‘분열 이데올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의 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2007년 일부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했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정작 자신들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책임론에 정면으로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단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일부 정규직과 노조 지도자가 비정규직 문제를 남 일 대하듯 하는 현실을 내버려 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규직 양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하지 말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이주호 단장은 이전에 진보진영에서 제출한 재정 대안은 “당위적인 정부 책임 확대 요구, 또는 부유세 신설,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었다”하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공적 재정 확대, 파이 키우기에 적극 나서[기] 위해 [국고 지원에 더해] 가입자 보험료 일부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6천7백4원”만 더 내면 된다지만, 이런 태도는 정작 누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를 회피해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주·부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부족해진 재정 만큼 국고 지원을 줄이는 마당에 말이다.

그래서 같은 토론회에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현실에서는 참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영역”이라며 이주호 단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야한다고 정부와 기업주들이 양보할

“국민 1인당 6천7백4원”만 더 내면 된다지만, 이런 태도는 정작 누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를 회피해 버린 것이다.

리도 없다. 2005년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전제로 수가 인상에 합의했지만 정작 공급자단체(병원 등)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에 동조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법적으로는 정부의 국고지원금도 증액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료가 각각 6.5퍼센트, 6.4퍼센트 오른 2007~2008년에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에서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물론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겪어 온 이주호 단장이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지난 3월 ‘보호자 없는 병원’ 토론회에서 이주호 단장이 일자리 대책으로 간병인 노동자들의 병원 직접 고용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인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도 ‘사회적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매달린 결과 양보한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정부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를 요구해야 한다. 파견근로가 아니라 직접 고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 수단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정부가 강제[역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김태현) 대중투쟁이 돼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불러온 재앙

사이언 이사프(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고 파키스탄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식으로는 점점 심각해지는 정령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는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같은 자리에서 두 개의 머리가 자라난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서방 정부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묘사하기 알맞다.

현지인들의 “민심”을 얻어 승리한 것으로 여겨졌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8년이 지난 오늘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과 동맹인 파키스탄 탈레반은 지난달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쪽으로 60마일(약 96킬로미터) 떨어진 부네르 지역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파키스탄군은 그들을 공작 부네르 바깥으로 몰아낼 수도 있었지만,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파키스탄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라고 경고하기 전까지 움직이기를 망설였다. 전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제 이슬라마바드 주변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 클린턴의 발언은 이 전쟁이 이제 파키스탄까지 조카낼지 모른다는 그들의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저항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과 나토, 아프가니스탄 정부 내 그들의 동맹들은 카불을 제외한 나머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거의 통제하지 못했다. 이제는 심지어 카불의 일부도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전쟁 초기 점령군이 잠시 누렸던 현지인들의 지지는 이제 남아 있지 않다. 점령군의 폭격으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한 것이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저항군을 숨겨 줬다고 의심되는 마을을 공격하는 “야간 수색”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분노는 저항 세력에 대한 압력적 지지도 바뀐다고 있다.

보급

이렇게 점령군은 지지를 잃고 고립됐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철저히 포위돼 있기도 하다.

아프가니스탄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아서 점령군은 파키스탄을 통해 운반되는 보급품에 의존한다. 이 보급품은 파키스탄 북쪽 저항 세력이 통제하는 지역을 거치게 돼 있다. 지난 몇달 동안 저항 세력은 보급 차량을 공격하고 장갑차 수십 대를 탈취하고 항구 도시 카라치의 군수품 창고를 습격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용병이 NGO의 구조품을 받으러 온 헬만드 주 산간 지구 출신 난민 여성들에게 호통을치고 있다. 분쟁 지역에서 피난 온 아프가니스탄인들로 북적대는 난민 캠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곳 용병들은 캠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지급된 총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프파 전략의 성패는 가장 큰 판돈이 걸린 곳, 즉 저항 세력의 은신처를 파괴하려고 파키스탄까지 확장한 전쟁에 달려 있다.

점령군은 이런 같은 아프가니스탄 인접국에 도움을 청해야 했다. 이란은 아프가니스탄 서쪽 지역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수니파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시아파 무슬림의 근거지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토의 일부 국가들은 나토 군대에 보급품을 전달할 때 이란을 설득해서 이란 항구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란과의 거래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란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경제 제재, 핵 프로그램 등 문제에서 서방과 갈등관계에 있다.

대안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 북쪽 국경을 맞닿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불안정한 국가들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여기서는 러시아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 러시아는 이 나라 정부들이 보급품을 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언제든 다시 이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러시아 서쪽 국경을 따라 설치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MD) 같은 문제에서 미국과 유럽 열강들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쥐게 됐다. 이런 압력을 면하려고 서방 정부들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사적이지만, 지금 여기엔 “아프파(Af-Pak) 전쟁”이라는 불길한 프리표가 붙어 있다.

지난 3월, 오바마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다.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강화할 시간을 벌기를 기대하며 미군을 더 많이 파병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고, 전임자 부사가 이미 확인했듯, 나토는 많은 군대를 보내길 꺼려 한다. 나토 지도자들은 전세를 뒤집으려면 더 많은 군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6만 명과 다국적군 5만 8천 명이 주둔해 있다. 추가로 파병될 예정인 미군 2만 명은 군사적으

로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적다.

1980년대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할 당시에는 소련군 최대 15만 명이 아프가니스탄 군대 13만 2천 명과 함께 힘을 합쳐 저항 세력을 억눌렀다. 반면 현재 점령군은 아프가니스탄 군대 8만 명의 지원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오바마의 전략에는 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를 포기하는 것과 ‘온건 탈레반’, 즉 지역 저항 조직과 협상을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카르자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는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려는 계획을 좌초시키려고 8월에 조기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양보안을 제시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타협은 그는 시아파 무슬림 여성들이 누렸던 얼마 안 되는 권리들을 박탈했다.

카르자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탈레반의 일부와도 협상을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미국이 지역 저항 세력 중 일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프가니스탄에 새로 파병되는 군대의 다수가 막대한 수의 양귀비 경작자들을 파괴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프파 전략을 통해 오바마는 이 전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후퇴하면 베트남 전쟁 뒤 미국이 겪은 최악의 군사적 패배로 인식될 것이다.



카불의 비극 사진 제공 Guy Smallman

● 한 14세 소년이 병원에서 쓰고 버린 주사기들을 쥐고 있다(위 왼쪽). 소년은 카불 북쪽의 쓰레기 더미에서 이것들을 주웠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금속들을 쓰레기장에서 찾아 하루에 약 85페니나 1천6백 원쯤 번다.

● 헬만드 주 난민들(위 오른쪽)이 이렇게 NGO에게서 의복이 든 소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는 무시당하고 중동인들의 선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 카불의 전 러시아 문화센터가 파괴된 건물 안에서 한 헤로인 중독자(오른쪽)가 바깥을 둘러보고 있다. 하루 최대 2천 명의 헤로인 중독자들이 이 건물에서 값싼 헤로인을 사서 이용한다. 지방의 범죄자들이 불안정한 치안을 이용해 실업자들에게 헤로인을 팔아 돈을 벌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땅 위의 하수가 난민 캠프를 가로질러 흐른다. 거울을 거치며 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걸려 숨졌다.

번역 조영훈 기자

새로운 반전 연대체 건설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한국학의 반전평화연대운동 평화와 향후 전망 모색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경제를넘어,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등 18개 단체에서 공동 발의해 열린 이 워크숍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반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새로운 반전 연대체를 꾸리기로 했다.

그래서 5월 21일, 제 시민사회노동절당 단체들이 모여 ‘새로운 반전 연대체 결성’을 위한 연석회의(가칭, 이하 연석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규탄 항의 행동에서 주도력을 발휘한 단체들과 지금은 해소됐지만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을 이끌어 온 단체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향후 반전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의 산물로 있었다.

나는 새로운 반전 연대체에서 다룰 핵심 의제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과 점령 반대, 둘째, 한국 정부(이명박 정부)의 전쟁·점령 지원 반대, 셋째, 한반도 평화. 함께 발제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의제

그렇다면 왜 이 세 의제인가?

첫째,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 실상으로는 나토 전선이 파키스탄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이 보여 주듯 다른 열강들도 군사력으로 위기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공황에서 세계대전으로 발전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런 경향은 경제 위기가 심각할수록 강해질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논란은 이미 시작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파병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명박 정부도 판돈이 점점 커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실질적 지원”을 약속해 파병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 의제인 한반도 평화의 경우,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만약 미국이 중동과 이란바 ‘아프파’ 전선에서 승리한다면 중국 등 미국의 경쟁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의제들에 기초해 연대체를 건설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연대의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포괄적 의제 — 그는 “명패 집한 반대”란 표현을 사용했다 — 를 가진 연대체의 건설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이라크 점령 종식, 아프가니

스탄 파병 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탄 공격 외의 정점에서 공동의 입장을 내기 불가능”하고, “합의되는 문제만 가지고 연대체를 운영하면 의제보다 조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의제를, 예컨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FSI 참가 반대만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MD나 NPT 등 다른 문제도 포함할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물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침략 반대 활동의 예를 들면서, 굳이 연대체 없이도 단일 정점으로 모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진 ‘경제를 넘어’ 활동가는 이렇게 반박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만 한정하면, 파병 중심성 때문에 중요한 반전 정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이라크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한계를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반전 정점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려고 처음부터 논의를 하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

나는 박정은 실장이 최소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은 이미 단일 정점 조직이 아니라 반전 운동에 관한 포괄적인 연대체일 거라고 말했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 간담회에서 확인했듯이, 이미 반전 운동 내에서 포괄적 연대체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다만, 세 가지 의제는 아직 제안일 뿐이고, 구체적 내용은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대연 집행위원장은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야”하며,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 실천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를 인내심 있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 방식

의제 외에 연대체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 염창근 평화바다 활동가는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당장은 “단일화”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기반과 다양한 기제들”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나와 정대연 집행위원장은 일단 폭넓은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집중 실천을 할 수 있는 연대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대연 집행위원장이 구상하는 새로운 반전연대체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상설적 의사결정 기구를 갖추지 않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것은 느슨한 연대체를 표방한다는 점 때문이다. 분명, 상이한 정치를 가진 단체들이 특정 사안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체에서 느슨한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렇다 해도 연대체 활동 본연의 목적인 대중 행동을 결정하고 조직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필요하다.

새로운 반전 연대체의 의제와 운영 방식에서 아직 토론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이날 워크숍은 연대체의 필요성을 공감했을 뿐 아니라 연대체를 향한 실질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의 주장처럼 “연대체 속에서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여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덕업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규탄 항의 행동 공동 연락자

촛불 1년 평가 논쟁

제2촛불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교훈 끌어내기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며 한국 사회를 휩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년 전 촛불의 그 찬란한 광경과 열기, 가슴 벅찬 흥분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촛불시위 1년을 맞아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와 참여사회연구소는 4월 28일 ‘촛불 1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시민포럼을 했고, <경향신문>은 4월 30일 ‘촛불 1년, 한국은 어디로’ 토론회를 열었다. <레프트21>도 4월 28일 ‘촛불은 무엇을 이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강연을 했다.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당대 비평 기획위원회), «미네르바의 촛불»(조정환) 등 촛불 1년을 돌아보는 책도 몇 권 출판됐다.



촛불은 성과를 남지 못한 중간계급의 행동이었나?

그런데 촛불시위 1년에 대한 평가와 주장 속에 촛불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있다. 당대비평 기획위원회가 엮은 책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가 대표적이다. 이 책은 <한겨레>의 지적처럼 “최근 지식인들이 보여 주는 촛불에 대한 비판적 거리 두기”를 보여 준다. 이 책의 ‘기획의 말’에서 서동진 교수는 “1987년 이후 가장 강렬하고 심지어 화려했다 할 정치적 동원인 ‘촛불시위’가 정작 아무런 정치적 효과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의 필자 중 하나인 이택광 교수는 “촛불은 이명박 정부와 부르주아를 향해 패락의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중간계급의 행동”이었고 “비정규직이나 빈민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린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도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산층일 것”이라며 “촛불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의 현장에 오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백승욱 교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어떤 담론도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촛불 항쟁 이후 이어진 공간 탄압과 다시 시작된 이명박의 악법 추진 때문에 촛불에 대한 이런 인상주의적 ‘거리두기’가 싹트는 것 같다. 그러나 <경향신문> 토론회에서 김중엽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난해 촛불시위는 “[이명박이] 취임 몇 개월 만에 두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도록 만들고 … 대운하사업, 수돗물 민영화, 의료민영화 사업을 정지시켰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제어했다.”



이명박 퇴진은 불가능한 목표였나?

물론 촛불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쥐구멍을 없애지 못하면 쥐가 다시 나타나 방을 더럽히고 물건을 갉아 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촛불의 어떤 한계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일까? 정태인 교수는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지난해 촛불은 이명박 퇴진”이 목표였는데 그것은 “임기 1백 일도



노동자·기층 서민들이 참가한 지난해 촛불시위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며 큰 흔적을 남겼다.

사진 임수현

<레프트21> 강연에서 ‘고대녀’ 김지윤 씨는 “[‘촛불시위 이후에도] 방송법 개혁은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에 부딪혀 두 번이나 처리가 좌절됐다. 한국 사회 5대 권력이라는 경찰청장은 자리에 제대로 앉아 보기도 전에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촛불시위가 낳은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한 세대 전체를 거대하게 급진화시켰다는 점이다. <레프트21> 강연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기업의 이윤 추구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집단적 깨달음을 얻은” 것이 촛불이 남긴 가장 큰 성과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4.29재보선에서 진보 후보의 승리도 촛불이 낳은 급진화의 반영이다.

따라서 “‘거리의 정치’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제도정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점”(홍성태 교수, <한겨레> 5월 4일치)이 “촛불의 최종적인 교훈”이라는 평가는 틀렸다. 촛불시위는 아

래로부터 대중행동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온다는 점을 보여 줬다.

더구나 촛불시위가 ‘비정규직 등이 배제된 중간계급 운동’이었다는 평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대 1백만 명까지 거리로 나섰던 촛불시위는 청소년에서 시작해 청년, 대학생, 직장인,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노동조합 조합원 등으로 확대됐고 비정규직도 그 일부였다. 촛불 때 거리로 나온 청년들의 많은 수가 불만과 분노로 가득찬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지난해 6월 이랜드 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우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며 “촛불 물결을 보며 절망했다”고 말한 바 있다. 끝 모를 장기 투쟁 속의 고립감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비정규직 투쟁을 관심 밖으로 밀어낸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공간과 기회를 넓혔다. 이랜드 투쟁을 알리는 책 판매와 지지 모금이 많이 된 것도

촛불 속에서였다. 그리고 광우병을 계기로 불붙은 촛불의 불씨는 곧 민영화, 경쟁 교육, 비정규직 등 수많은 문제로 옮겨 갔다.

진정한 문제는 ‘1+5’로 형식적으로만 의제를 확대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태도였다. 따라서 촛불시위가 단지 ‘먹거리 등에 기반한 생활정치’였다는 평가도 부적절하다. 촛불은 건강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였다. <경향신문> 토론회에서 손석춘 씨도 촛불시위는 “시장과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촛불이 사그라들고 나서도 제주도에서는 주민투표로 의료영리법인화를 막아냈고 촛불 시민의 발길은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투쟁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촛불이 ‘신자유주의 반대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난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경쟁 교육·의료민영화 반대 등으로 번진 촛불은 이 모든 것의 ‘배후’인 정권과 정면충돌했고, 정권이 이런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퇴진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로서도 광우병 문제 하나만 양보해도 이후 정책 추진력과 정권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판이었다.

당시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도 “[쇠고기] 재협상이 마치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말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절충이나 타협의 여지가 적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명박의 임기가 ‘1백 일도 안됐다’는 것보다 ‘4년 9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에 더 주목했다. 그래서 6월 11일 ‘리서치 앤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무려 37퍼센트가 ‘이명박 퇴진’을 지지했고, 6월 16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40퍼센트가 지지했다. 촛불 참가자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퇴진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더구나 6월 10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진 후에 정권 퇴진은 명백히 실질적 가능성이 됐다. 당시 청와대·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권 퇴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촛불은 어디로 가야 했는가

이 상황에서 촛불의 정치적 상징 구실을 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노동자·서민의 생활상의 요구들로 의제를 실질적으로 확장해야 했다. 나아가 거리의 열망을 수용해 이명박 퇴진을 운동의 목표로 제시하며 이명박 정권의 재벌·강부자 기반을 뒤흔들 노동자 파업을 호소하고 건설해야 했다. 이것이 1백만 명이 모인 6월 10일 이후 촛불이 가야 할 길이었다.

1백만 명이 모여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 파업은 촛불이 매우 절실하게 고대하던 ‘실종된 고리’였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은 열광적 지지를 얻으며 승리했고 지난해 6월 19일 MBC 여론조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은 58퍼센트였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촛불이 보여 준 놀라운 자발성이 단호한 의식적 리더십과 결합해야 했다. 대중의 자발성은 그것을 일관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응집력 있는 조직, 올바른 전략과 결합할 때 사회를 바꿀 막강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 1년을 평가하며 이런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일관된 방향과 응집력 있는 조직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조대엽 교수는 “한국의 ‘사회운동’은 촛불과 함께 … 탈조직 운동의 주기에 들어섰다”고 했다. 진중권 교수는 <경향신문> ‘시론’에서 “촛불집회는 거대한 온라인 게임이었고 … 디지털 유희 정신의 표현”이라고 했다.

촛불을 적극 찬양하는 «미네르바의 촛불»에서 조정환 씨도 “단일한 목적과 방향 … 에 대한 거부”를 촛불의 특징으로 제시하며 찬양했다. 이런 자율주의적 평가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조정환 씨는 이명박 퇴진과 노동자 파업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방향 제시를 회피하고 칼라TV 생중계에 치중한 진보신당을 예로 들며 “지도에서 중계(매개)로의 진보정당의 이러한 역할 재설정 … 실험적이고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치켜세운다.

촛불 1년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촛불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제2의 촛불을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제2의 촛불로 터져 나오도록 조직하고,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려면 촛불 1년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

agora@left21.com

독자토론광장

5월 18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레프트21〉은 비판적 지지라는 전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레프트21〉메이데이 특별호의 헤드라인(“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은 그런 대로 봐줄 만했다. “반MB”라는 공식이 눈에 거슬렸지만 말이다. 진보 진영 안에서 그 공식을 애용하는 훨씬 더 큰 경향인 주요 NGO들과 NL 경향은 흔히 그 공식을 이용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필요성을 넌지시 언급한다. 특별호 헤드라인은 이에 반대해 진보 진영 자신이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듯했다. 하지만 기사 본문 안에서 필자인 장호중 기자는 “중도좌파가 반MB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해 마치 중도좌파를 찬양·고무하는 인상을 준다. 특히 장 기자가 진보신당 후보로 울산 북구 당선인인 조승수 씨에 대해 끝까지 단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아 이 인상은 굳혀진다. 물론 선진 노동자라면 마땅히 조승수 씨에게 투표해야 했다. 사노

준처럼, 대기업과 부호들의 우파 정당 한나라당의 후보와 조승수 씨 가운데 도대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회피하고 사실상 기권을 독려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이기는커녕 종파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조승수 씨를 아무 비판 없이 지지할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직전 당내 평등파(PD 경향)의 한 지도자로서 그는 경쟁 분파인 자주파(NL 경향)를 〈조선일보〉지

면에서 “종북주의자들”이라고 매도했다. 자유주의자인 고종석 〈한국일보〉객원논설위원조차 2008년 1월 3일치 컬럼에서 양식 있게 이를 꼬집었다. “분당론자 가운데 일부는 대담하게도 선전투쟁을 극우 신문에 의지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실용주의’ 인지는 모르겠으나, 좌파의 기품에 크게 못 미치는 일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 무덤 파는 것이다.”

최일봉

전술적으로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레프트21〉4호 독자편지에서 금융노조 KB 국민은행 지부 김문성 연구부장은 전술적으로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전술”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전술은 전투에 대한 이론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에 쟁점이 돼 있는 전투는 금산분리(완화 반대) 투쟁이다. 이 투쟁에 대한 그의 이론 자체가 “전술”이거늘 또 “전술로선 유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무래도 그가 “전술”을 계획책으로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듯하지만, 이보다 좀 더 큰 문제는 그가 내 주장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마치 내 논적의 주장을 오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김문성 씨가 금산분리 완화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는 비판을 하지 않았다. 3호 독자편지의 내 말을 인용하면, “그리하여 김 연구부장에 따르면 부패와 비리는 물론 심지어 경제 위기 심화도 재벌의 은

행 소유 탓으로 돌려진다.”

이처럼, 나는 그가 금산분리 완화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고 비판한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본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나에 대한 반론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이다. 쓸데없이 말이다.

그러나 나는 백보양보해 이것이 설사 사실이 라손 치더라도 노동자들이 금산분리 투쟁을 할 이유는 못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전투가 아니다. 다른, 매우 중요한 요구들과 전투들이 많다.

둘째, 이길 승산이 없다. 요구 자체가 공상적이기 때문이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했듯이 자본의 세 형태인 생산자본과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은 서로 연결되는 자본의 순환 국면들이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자본주의 의회의 개혁 입법 권력으로는 턱없고 자본 자체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럴 요량

이라면 무엇 때문에 금산분리 요구를 내놓는가? 그냥 고용 보장, 임금 보전, 노동시간 단축, 국유화 등 행동강령의 요구들을 제시하면 되지 않겠는가.

셋째, 재벌 혐오라는 이해할 만한 대중 정서에 기댄 비(非)재벌 자본과의 인민전선(국민연합)이라는 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뭇을 피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독립적 계급 행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앞서의 두 번째 논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김문성 씨가 제안하는 길은, 요컨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다 전리품마저 없는 지뢰밭 전투를 치르자는 것이다. 그는 다른 중요한 전투들을 배치하는 법, 즉 전략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전략 없이 전술에만 골몰하게 되면 독일사민당이 1백 년 전쯤에 그랬듯이 기회주의라는 개골창에 빠지게 된다.

최일봉

은행 국유화 요구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야만 할까?

금산분리 관련 논쟁에 의견이 있다. 〈레프트21〉3호에 실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최일봉)를 지지하는 내가 볼 때, 지난 호 “금산분리 완화 반대가 전술로선 유용하다”(김문성)는 재반론에서 남겨진 논점은 은행의 국유화를 요구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에 전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

그동안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여부를 놓고 진행돼 온 논쟁은 한 쪽에 시중은행들의 노동자·서민 배제적 횡포의 원인을 투기자본의 은행 소유에서 찾고는 해결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 쪽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고 훨씬 큰 피해가 생길 것이니 반대해야 한다는 구도였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논쟁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회의적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시중은행의 다수 지분을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은행지분소유형태가 나올지, 삼성 같은

재벌이 은행을 갖는 게 나올지 따지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 보인다. 시중은행들의 ‘서민금융 서비스’는 더 나빠질 것도 없으리만큼 이미 악화돼 있고, 부패·비리·금융사고·투기적 자금운용 행태도 극에 달해 있다. 산업자본도 더 나올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어 보인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이미 세금회피·계열사 지배권 유지 관련 법망 회피·위장 지분 보유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은 삼성전자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삼성생명 외에도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등의 금융계열사를 통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고 있다.(삼성증권 등을 통해 투자은행을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은행 소유에 그토록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나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전술적 입장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와 제2금융권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져 있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맑스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산

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여부에 따른 대중 생활상의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하는가?

관련해서 김 동지가 〈레프트21〉2호에서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는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야욕”이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게 들린다.

그럼에도 김 동지는 〈레프트21〉4호에서 전술로서 유용성을 거듭 강조하며 은행 국유화를 요구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반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지분의 압도다수를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현실에 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본격 사유화”라고 여길 수는 없을 것 같다. 남은 문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의 민영화일 텐데, 이를 반대하기 위해 반드시 금산분리 완화에도 반대해야 할 것 같지는 않다. 김 동지의 말대로 금산분리의 유지 속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은행 민영화 시도는 계속돼 오지 않았는가.

정중남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의 ‘사회 연대’ 구상에서 우려스러운 점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주요 일간지에서는 임성규 위원장의 기자회견담화 내용을 “민주노총, 6월 총파업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실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막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이 수없이 납발한 총파업, 실효성이 없는 총파업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했다. … 나는 준비되지 않은 총파업을 갖고 소위 ‘뺑기’ 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일부 기자들이 입맛에

따라 멋대로 해석하고 썼다” 하고 언론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언론이 노동절을 앞두고 임성규 위원장 말을 빌미 삼아 제멋대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뷰 내용을 읽어 보니 임성규 위원장 생각에도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공공성 강화 투쟁, 소비자 and 생산자가 상호 득이 되는 부문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파업”이라는 “사회연대파업”이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

길 바란다.(〈노동과세계〉, 임성규 위원장 “사회연대 총파업 유효하다”)

얼마 전 공무원연금개약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임성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민중이 하나로 모이는 데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민주노총이 내세운 사회연대노총으로 공무원노조가 나서 달라”, “4천만 민중이 골고루 함께 누릴 수 있는 …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합당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강화 투쟁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인가? 임성규 위원장의 발언은 꼭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사수 투쟁이 “이기주의”라는 지배자들의 공격 이데올로기를 한편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 발언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논쟁됐던 사회연대전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난호 〈레프트21〉에 박천석 씨가 썼듯, 공무원연금 개약은 국민연금 개약의 시작이다.

김지현

우원석 영화칼럼

뱀파이어가 영생하는 이유



뱀파이어가 세상 어딘가에 진짜로 있다고 하자. 그리고 우연찮게 한국에 왔다가 박찬욱 감독의 뱀파이어 영화 〈박쥐〉를 보았다고 하자. 그가 이 영화를 좋아할까.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박쥐〉가 형편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영화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밀도 높은 연출, 근사한 촬영, 뛰어난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 늘 그래왔듯이 박찬욱 감독은 이번에도 스크린 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숨쉴 줄개 총돌시켜 신선한 영화적 리듬과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그는 〈전함 포템킨〉(1925)으로 유명한 거장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몸타주 이론 — 이미지나 쇼트(Shot) 같은 영화의 구성단위들을 서로 총돌시켜 새로운 영화적 감흥을 창조하는 방법 — 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국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뱀파이어 입장에서 보자면 〈박쥐〉는 기본 나쁜 영화다. 에밀 졸라의 소설 〈테레즈 라캉〉에 기초했다는 이 영화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다룬 치정 살인극일 뿐이다. 뱀파이어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모티프들, 예컨대 흡혈, 영생, 전염 등과 같은 것들이 정작 영화의 전개와는 큰 상관없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들을 뒤라파락했던 뱀파이어의 매력들이 여기서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될 뿐이다. 〈박쥐〉에서 뱀파이어는 제목과 달리 홀대 받고 있다.

뱀파이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1994)가 개봉되던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접이 괜찮았다. 그때는 뱀파이어를 통해 나름 심각한 사유도 가능했다. 영생의 권태, 실존주의적 딜레마, 동성애, 성과 죽음에 대한 논의 등 많은 진지한 화두들이 뱀파이어를 둘러싸고 등장했다.

하지만 이제 필진이 바닷났다. 수많은 소설들, 영화들이 너무 많이 우려먹어서 모든 게 고갈됐다. 요즘의 뱀파이어는 〈박쥐〉처럼 액세서리 취급받거나, 〈블레이드〉 시리즈처럼 뱀파이어 헌터한테 쫓겨 다니거나, 〈언더월드〉(2003)처럼 늑대인간과 치고받는 굴욕을 감수해야 관객들의 흥미를 겨우 끌 수 있는 처량한 처지가 됐다.

그러면 뱀파이어의 문학적, 영화적 수명은 이제 다한 것일까. 그럴 리는 없다. 뱀파이어는 영생한다. 영생해야 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게 아니다. 영생의 진짜 이유는 창작자들의 상상력과는 무관하다.

호시절

동서고금을 걸쳐 뱀파이어 괴담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에 영향을 끼칠 만큼 커진 것은 질병의 전염과 확산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예컨대 중세 흑사병은 유럽 흡혈귀 민간설화의 기초였다. 최초의 뱀파이어 소설인 존 폴리도리의 《뱀파이어》(1819)의 경우는 18세기 동 프러시아를 휩쓴 뱀파이어 열풍에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 각종 전염병이 동 프러시아에 창궐했던 게 그 열풍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1897)가 19세기 말 인기를 끌었던 것은 결핵과 매독으로 몸살을 앓던 당시 영국 사회 분위기와 관계 있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다는 20세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공포소설의 거장인 리처드 매드슨의 걸작 《나는 전설이다》(1954)는 냉전, 핵전쟁과 함께 세균전의 공포를 배경으로 삼았다. 또 1980년대를 휩쓴 에이즈의 공포는 현대 뱀파이어 소설과 영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뱀파이어 괴담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먹고산다. 그러니 질병의 전염과 확산이 끊이지 않는 한 뱀파이어는 소설과 영화에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성능 좋은 핵무기는 무수히 만들면서 신종플루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요즘 같은 아만의 시대야말로 뱀파이어에겐 호시절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박쥐〉가 성에 안 차는 독자들에게는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헛미인〉(2008)을 권한다. 이 지메 당하는 아웃사이더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 이 영화는 굳이 뱀파이어 장르 팬이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수작이다.

우원석 영화감독

여성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을 돌아보며

‘운동권 가부장제’ 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견해

지난 2월 밝혀진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은 진보 진영 활동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최근에는 전교조 교사의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 청와대 성접대 사건과 관련돼 있는 우파언론과 한나라당이 간부로 아닌 몇몇 개인 회원의 일탈을 마치 전교조 전체의 문제인 양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좌파단체,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들은 민주노총을 비판하며 각자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인이 저지른 성폭력을 민주노총 전체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을 비판한 좌파와 페미니스트들의 지적처럼,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의 사건 처리 방식은 과연 노동운동이 여성억압 문제에 진지한지 돌아보게 했다.

실제로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여성 문제는 여성들만의 과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고, 심지어 “남성 노조 활동가들이 노래방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림살롱에 가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현대차 노조 여성 조합원)도 있었다.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자신을 동등한 동지로 여기지 않거나,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 활동가들이 있다고 토로하며 진보운동의 변화를 촉구해 왔다. 이런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고 남성들을 동지로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정당한 문제 제기는 혼란스러운 정서와 섞여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진보 진영에도 여성차별적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는 원인이 ‘운동권 가부장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좌파단체(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등)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주장을 수용한다.

가부장제라는 말을 워낙 모호하게 쓰고 ‘운동권 가부장제’라는 말을 그저 ‘운동권에도 여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더 깊은 함의가 있다.

가부장제 이론이 현실을 잘 설명하는가

페미니스트들은 현재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고, ‘운동권’에도 가부장제가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여긴다. 가부장제 이론은 여성차별이 남성지배의 결과이며, 사회가 계급으로 나뉜 것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건 여성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운동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이 이론의 당연한 결론일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계급사회의 역학에 기초해 여성차별을 설명하려는 맑스주의적 시도를 모두 ‘계급 환원주의’로 여긴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 투쟁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한 맑스주의를 수용하는 ‘운동권’ 들은 필연적으로 여성차별 문제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해 왔다. ‘운동권 가부장제’를 비판한 책 《오빠는 필요없다》의 저자이자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일원이었던 전희경은 “맑스주의가 ... 여성억압의 문제를 계급 모순에 흡수해 왔”고, 이것은 “전통적 맑스주의의 계략”이라고 평가했다.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에서 여전히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맑스주의가 여성해방에 소홀하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종종 제시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 투쟁과 꽤 일체감을 느끼는 좌파단체들에서도 맑스주의와 가부장제 이론을 절충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가부장제 사회에 살고 있을까? 계급사회가 여성차별의 토대이며 계급을 철폐하는 운동을 통해서 여성해방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맑스주의는 낡아빠진 구닥다리일 뿐일까?

가부장제 이론가들은 남성이 여성차별에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여성차별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의 낮은 임금에 남성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까? 오히려 여성의 낮은 임금은 남성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의 낮은 임금에서 진정 이득을 얻



사진 레프트21

는 것은 자본가 계급이다. 여성이 주로 집안일을 떠맡기 때문에 남성이 이익을 누린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의 ‘손해’ 일 수는 있지만 남성의 ‘이익’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바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다.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에서 진정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거의 공짜로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받는 자본가들이다.

그러면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여성을 비하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남성에게 ‘이익’을 주는가? 이런 잘못된 행동은 그러나 대체로 소외의 왜곡된 표현이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허위의식일 뿐이다. 여성차별이 체계적으로 유지되는 자본주의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여성차별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 의식의 찌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떨쳐내기 어렵지만, 체제에 맞선 투쟁 속에서는 떨쳐버릴 수 있다.

스페인 혁명, 파리 코뮌, 한국의 1987년 항쟁, 러시아 혁명 등 거대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수동적 존재’라는 생각과 동시에 여성차별 의식도 도전받았다.

오늘날 여성차별은 여전히지만 여성들이 노동계급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변화도 일어났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 여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눈에 띄게 주도적인 구실을 맡는다. 한국의 촛불시위를 평가하는 활동가들은 여성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만약 가부장제 이론대로 성차에서 비롯한 차별이 영원하고 남성들이 여성차별에서 이득을 얻는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질적 조건이 변하면 여성의 처지도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맑스주의가 현실에 더 잘 들어맞는다.

맑스주의가 여성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한다는 비판도 부당하다. 맑스주의는 ‘여성 고유의 억압’이 있음을 인정한다. 자본가 계급의 여성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받고, 대를 잇는 수단처럼 취급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계급 여성보다

훨씬 덜 억압받는다. 이견회의 처 홍라희와 이랜드 여성 비정규직이 받는 억압이 같을 수 없다. 게다가 홍라희는 같은 여성이지만 자신이 지배하는 체제의 이익을 위해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편에 선다.

계급이라는 토대를 공격해야

따라서 계급이라는 토대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이 억압을 없앨 수 없다. 여성들에게 양육과 가사노동의 책임을 떠넘기고, 저임금으로 묶어 두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 이득을 얻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가 바뀔 때까지 손 놓고 있자거나, 일단 여성 문제는 뒷전으로 미뤄두자는 것이 아니다. 전희경은 “(맑스주의에서) 여성억압 해제는 근본적인 해방에 단순히 수반되는 부수 현상으로 치부됐다”는 한 페미니스트의 말을 인용했다. 스탈린주의의 유산 때문에 진보운동에서 실제로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구 소련과 동유럽, 북한, 중국 등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성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 낳는 도구로 취급받고 저임금과 열악한 일자리로 고통받는다. 이것은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과는 무관하다.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은 “여성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다”는 점을 실천에 옮기려 했다. 인류의 절반이자, 노동계급의 중요부분인 여성들이 억압받는 상태로 남아 있다면 노동해방은 가능하지도, 유의미하지도 않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권, 낙태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해 왔다. ‘국제 여성의 날’을 제언하고 조직하기 시작한 것도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볼셰비키의 압도 다수는 여성이었지만, 발전한 자본주의에서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혁명적 여성해방 조치들 — 낙태와 이혼의 완전한 자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집단적 공동 육아, 사회화된 식당 시설 등 — 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물론 계급사회의 찌꺼기들이 남아 남성 우위를 유지하길 원하는 남성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볼셰비키당으로 조직



간부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는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오른쪽) 파업에 나서 승리를 거둔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 오늘날 여성들은 진보운동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투쟁해 나가면서 여성차별 의식에 도전할 수 있다(왼쪽)

된 선진 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단결이 계급 전체에 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런 저항에 맞서려 했다.

비록 자본주의의 변형인 스탈린 체제가 혁명의 성과를 파괴하면서 여성해방을 위한 시도도 시궁창에 쳐박했지만 러시아 혁명의 경험은 여성해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 준다.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자신의 문제를 걸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중요하다. 1970~1980년대 동일방직 투쟁 · 구로동맹 파업, 2000년대 롯데호텔과 국민 · 주택은행, 이랜드와 기흥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투쟁의 주체임을 보여 줬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투쟁 이상이 필요하다. 위에 제시한 투쟁들도 모두 남성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계급의 광범한 지지 속에서 승리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괴롭히는 자본주의 체제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물론 단결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에게 왜 단결이 절실한지 이해시키고 경험에서 입증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동등한 주체로 여기고 연대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조직하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다.

이를 위해 토론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성 노동자 집단을 낙인찍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그간의 반성폭력 운동이 규약 제정이나 성폭력 교육이라는 형식에 치중한 경향이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은 2차 가해자가 될 위험 때문에 차라리 입을 닫았고 결국 논의는 봉쇄”됐다고 평가한다.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범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가부장제 이론에 이견을 제시하면 여성문제에 불철저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토론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 · 남성 노동자가 함께 여성차별의 현실과 해방에 대한 토론과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논쟁

진보 진영은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쌍용차처럼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부도 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화 요구가 진보 진영의 대안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유화 요구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레포트21>은 앞으로도 진보 진영 내의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하는 기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제 ‘사회화’ 를 중심으로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이종택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최근 쌍용차 처리를 놓고 일부에서 ‘국유화’ 를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정상화한 다음 국가가 지배·소유하는 방식을 상정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국유화’ 발상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만 고민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처리 과정 전반과 절차, 내용에 대한 고민이 없다. 소유·지배 구조가 기업 처리의 전부는 아니다.

둘째, ‘국가’ 의 구실을 과도하게 상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주역의 하나가 국가요 정부인데, 그런 국가·정부에 기업의 소유를 맡기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셋째, 역사적으로 ‘국가’ 소유 형태는 그 한계를 충분히 드러냈다. 사회적 소유를 공적 소유로 바꿀 때,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통제’ 가 없는 어떤 소유 형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국유화’ 는 패배와 좌절의 역사이며, 더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정부와 자본이 조선사와 건설업체를 구조조정하면서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이 기업 처리를 주무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채권단, 부실기업의 경영진이 바로 그들이다. 금융기업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 처리를 주무른다는 건 기업의 ‘수익’ 을 기준으로 ‘수익’

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을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적용하는 것이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갖는 것도 문제다. 평생 법전을 뒤지는 일 말고 하는 것이 없는 판사는 총자본과 정부의 의지에 충실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자본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철

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구계획’ 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은 대부분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력감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노조는 이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개입

진보 진영과 노동운동이 기업 처리에 대해 대안을 찾으려면 기업의 소유 구조 이전에 기업 처리 과정과 절차부터 ‘사회화’ 해야 한다. 이때의 사회화란 부실 기업을 가려내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사회적 기구’ 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과 정부, 자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노동자·민중·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단위를 만들어 거기에서 다루고 결정해야 한다. ‘대외적 방식’ 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기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판단 역시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절대 ‘수익성’ 을 기준으로 하거나 ‘흑자와 적자’ 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그 기업이 지역과 사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판단 위에서 기업의 여러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사회적 기구를 통해 기업의 처리 방식을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결정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를 밟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사회적’ 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평적 이동을 전제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재취업 전까지 기존에 받은 임금의 최소 80퍼센트는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한 기업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정부의 자금’ 이 아니다(국유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를 간혹 국가의 돈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국민의 세금’ 이다. 그러므로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 그 이후 투입규모와 투입된 자금 운영 등에 대한 모든 사안은 ‘국민’ 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노동자·민중과 지역주민, 그리고 해당 기업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위원회(가칭)’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유화’ 라는 조처는 사실 불필요하다.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순간부터 그 기업은 사회적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규모만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해당 기업을 사회적화

하는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때, 기업 소유의 최종적인 양태는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덧붙여야 할 한 가지. 부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그 순간부터 주요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그리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핵심(이사급)에 기업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법정구속형과 더불어 경영을 주도한 시점 이후 쌓은 개인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경영은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위원회’ 를 주축으로 한 이사회에서 담당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사는 ‘경영협의회’ 를 만들어 일상적인 기업 운영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화는 ‘소유 형태’ 를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차원의 정책에서부터 기업 하나의 소유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민중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양식과 그 과정을 만든다. 현재의 경제체제에서건 새로운 노동자 중심의 사회에서건 중요한 것은 ‘민중에 의한 지배’ 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라도 자기 지배와 직접 통제가 대안 사회의 기본 원리가 돼야 한다.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는 투쟁의 결집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정종남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업이 부도나면 노동자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쌍용차 법정관리를 계기로 부도 기업의 일자리 유지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의 대처는 기업주와 채권단의 이익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다. 쌍용차에서도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 후 매각으로 상하이차와 채권단(산업은행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상하이차의 지분은 그대로 보장하면서, 노조가 요구한 공적자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직 노동자를 쥐어짤 공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의 실패에 왜 노동자가 고통을 전담해야 하는가? 개별 기업주가 파산해서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면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 경영진의 지분을 회수하고, 채권단의 빚을 없애고, 자금을 지원해서 노동자 해고 압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당연히 재원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국방비 삭감을 비롯해 재벌의 유보금 회수, 부유층 감세 철폐 등으로 조달해야 한다.

부도 기업 처리는 기업주와 투기꾼 살리가 아니라, 기업주와 부유층에 비용을 물려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국유화 방식이어야 한다.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

연합, 해방연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이 같은 고용보장 방식의 국유화를 제기했다.

그런데 ‘국유화 요구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광범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 이라는 생각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조차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주최한 쌍용차 문제 토론회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정명기 쌍용차 노조 자문교수 등은 노동자의 ‘진심’ 을 보여줘야 교섭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다며, “확실한 양보안” 을 내라고 노조에 제안하거나, “산업 발전 전략적 관점” 에서 기업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보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해결책이 된 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쌍용차 노조도 2천6백46명 해고 계획 발표 직전에 양보안을 냈지만 사측은 이에 아랑곳 없이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1998년 현대차나 2001년 대우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희생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희생 방안이나 산업 발전 전략에 집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도전하기

한편, 쌍용차 노조 정책 자문단에 포함된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택 부소장은 국유화보다는 ‘사회화’ (국민기업화, 지역기업화 등 노조의 지분 참여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부소장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기존 국유기업에 대한 불신

은 정당해 보인다. 옛 소련이나 중국 등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국영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서유럽 사민당 정부, 한국의 공기업도 민주적인 노동자 통제와 하등 닮은 점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를 뒤엎지 말아야 한다.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는 기존 사기업과 별 차이가 없는 ‘열걸음’ 을 대안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유화 요구 투쟁은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구하는 데 핵심 의의가 있다.

국유화 요구 투쟁은 무엇보다 현실의 필요 때문이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압력에 밀려 희망퇴직을 받아들인다. 공장 가동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노동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사달릴 때, 정부가 국유화로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럴 때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는 투쟁의 결집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의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노동자 투쟁의 강도에 달려 있다. 국유화 요구는 그런 투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시행한 국유화는 대량 감원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량 해고를 전제로 한 국유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투쟁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유화 요구에 담긴 투쟁의 가능성을 보

국유화 요구는 기존 사기업과 별 차이가 없는 ‘열걸음’ 을 대안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구하는 데 핵심 의의가 있다.

지 않고 형식적 비판은 애초 문제의식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 모델로만 놓고 보면 노조의 부분적 지분 참여에 의의를 둔 ‘사회화’ 도 이윤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신디칼리즘 경향의 일부 좌파 활동가들도 국유화 요구가 자본주의 국유기업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다며 그저 생존권 쟁취 투쟁이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개별 기업주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금을 국가가 조달하도록 요구하며 싸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환상을 조장” 하거나 투

쟁에 “혼란” 을 자아내기는커녕, 개별 기업주와 해당 기업 노동자들만의 문제인 것으로 치부되는 부도 기업 고용문제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불황기에는 한 작업장의 경제투쟁도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부도 기업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 투쟁은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각하고 노동자들의 필요와 시장 논리가 충돌하는 모순성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불황기 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에 맞서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투쟁이 더한층 발전할 경우 심오한 사회변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도 기업 국유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 요구 투쟁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려는 강력한 투쟁에 달려 있을 것이다. 쌍용차 노조가 그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신디칼리즘

노동자주의. 참여한 정치 문제를 회피하고 그 대신 생산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을 압도적으로 강조하는 운동.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정치의 주도권을 개혁주의에 넘겨주게 된다.

기획 연재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③ — 우석훈

시장의 공세에 맞설 대안경제 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감옥과도 같은 학교를 빠져나오면 비정규직이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끔찍한 삶에 대한 고발이자, 이들에게 보내는 연민의 편지인 《88만원 세대》는 그동안 큰 반향을 얻었다.

우석훈은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라는 부제가 달린 책들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질주하는 한국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통렬히 고발하고 이를 해체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괴물”의 악행은 학생들에게 창의성 대신 군대식 규율을 부과하고, 일자리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새만금 갯벌의 파괴가 보여 주듯이 ‘토건자본주의’는 생태, 균형,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문화, 정주(定住) 등의 가치를 제물로 삼아 건설자본, 땅투기꾼, 관료, 정치인 들의 탐욕을 채웠다.

전쟁을 낳는 “괴물”에 대한 다음의 통찰도 타당하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오래된 목소리를 다시 기억해 보자.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이윤율이 시스템의 물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국주의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경제 위기가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 준 교훈이다.”

그는 “시장의 이윤지상주의 논리만이 관철되는 사회는 지옥”이라고 말한다. 그의 비판은 시장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환기시킨다.

그는 자신의 최신 저작 《괴물의 탄생》에서 ‘사회 경제’라 부르는 ‘제3부문’을 강화해 시장 제도를 “견제”하자는 포괄적 대안을 제안한다. ‘제3부문’은 시장의 이윤지상주의가 아니라 호혜(互惠), 연대, 증여(贈與)의 원리에 기초해 운영되는 비(非)시장적 경제다.

그것은 또한 국가로부터도 독립적인 경제다. 그에 따르면, 국가사회주의의 실패와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의 한계는 국가 개입을 통해 시장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우석훈의 대안은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폴라니는 인류 역사에서 상이한 사회들이 사회 전체의 유지와 낱가름께 대립하는 시장 제도의 파괴적 본성을 통제해 왔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시장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우석훈의 주장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참여계획경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맑스주의자들이 적극 공감할 만한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非)시장적 경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다.

우석훈은 ‘제3부문’이 아직까지 충분히 이론적으로 설명되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가령, 경제적 수단을 통제하는 기존 자본과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지 않고도 ‘제3부문’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우석훈은 ‘제3부문’에 상당히 많은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공정무역’, 생활협동조합운동, ‘사회적 기업’ 등은 그가 말하는 ‘제3부문’에 포함된다. 거대 자본의 착취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에서 친환경적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는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사회적 가치들을 방어하려는 진지한 열망을 보여 준다.

그러나 ‘공정무역’이 ‘자유 무역’에 의미있는 균열을 뚫었다는 증거는 없다. ‘공정무역’을 통해 일부 제3세계 커피



스타벅스 웹사이트에 있는 공정무역 홍보 페이지. 스타벅스는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제3부문’ 또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자본과 권력이 가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견제”로는 부족하다. 시장 체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농부들의 소득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커피 농부들의 소득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커피가격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에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의 5퍼센트도 안 되는 ‘공정무역’ 커피에 지불하는 ‘프리미엄’(노동계급이 소비자로서 지불하는)으로는 전체 커피 가격 폭락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따라서 ‘자유 무역’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면 커피 생산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

‘윤리적 소비’, 즉 원자화된 상품소비자로서 시장체제에 도전하는 방식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자본은 상품 생산을 위한 자원 획득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자본의 뒤를 봐준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 마케팅, 규제 등의 막강한 수단을 활용해 ‘제3부문’이라는 ‘불청객’들에게 자신들의 이윤이 새지 않도록 고삐를 틀어쥔다.

심지어 자본이 ‘불청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영역으로 포섭하는 경우도 있다. 네슬레, 스타벅스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공정무역’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호감을 이용해 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 만일, 이와 달리 ‘제3부문’이 스스로의 ‘경제적’ 동력으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가고자 한다면 시장의 논리인 ‘상품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어떤가? 이 또한 여럿든 기업의 존재법칙 — 이윤 추구 — 을 따라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이윤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등을 제공하려면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는 빌 게이츠의 ‘기부’나 장인의 습결이 살아 있는 공방형 소규모 공업도 ‘제3부문’에 포함시키는데, 이것들이 시장 “견제” 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제3부문’ 또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자본과 권력이 가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을 “견

제”하기에는 부족하다. 시장 체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한편, 그가 강조하는 ‘탈(脫)포드주의’나 ‘지식문화’ 경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진보 진영의 대응을 ‘반신자유주의’ 또는 ‘공공 부문 사수’라는 구호로 집약하는 것은 경제에서 일어난 변화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복지국가 모델은 포드주의적 생산에 기초해 노동과 국가의 힘이 자본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증대한 결과인데,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체제가 더는 작동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그가 노동계급이 아니라 새로운 ‘제3부문’을 강조하는 맥락과도 연결돼 있는 듯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회 복지 분야를 포함한 정부 지출 규모가 증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차지하는 구실이 쇠퇴했다는 증거는 없다. 세계화 시대에 노동계급의 힘이 약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임금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는 과장이다. 1970년에서 2001년까지 선진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증가했다.

그는 ‘지식문화’ 강국으로서 스위스를 대안 모델로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자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어 시장 논리에 도전해야 한다는 그의 다른 주장과 모순된다. 네슬레, 로슈 등 다국적 기업의 천국이자, 해외 자본가들의 자산 도피처 구실을 하는 나라를 대안으로 여겨야 할지도 의문이다.

비(非)시장적 대안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맑스주의적 통찰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장 논리와 근본에서 다른 운영 원리를 따르는 경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제도와 국가의 적대(포섭을 포함해)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에 직접적·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편, 폴라니도 인식했듯이 시장의 광기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시도가 단일하지는 않다. 여러 사회 세력들이 상이한 시도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시장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계급은 체제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집단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 전체의 사회화에서 이득을 얻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세력들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상우 객원기자

호쌤 엘하말라위 칼럼

51년 만에 독립노조를 쟁취한 이집트 노동자 운동



이집트 신문 〈엘바달〉 기자

이집트 세금징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 파업 투쟁에서 승리한 지 14개월 만에 독립 노조 결성에 성공했다. 1957년 이후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독립 노조가 탄생했다.

나는 징세노동자 수백 명이 나 시르 시 노동부 건물 앞에서 독립 노조를 승인하라고 시위하는 데 함께했다. 그날 노동자들은 대단했다. 두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부 건물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노동자들과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노동부 관리들은 전투적 시위의 압력에 밀려 노조 지도자와 면담하는 것을 수용했다.

노조 지도자 중 한 명인 카말 아부 에이타는 면담하러 노동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 세기에 우리는 영국 식민주의자들과 싸워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립 노조 건설을 허용해 달라며 이집트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투쟁도 앞의 투쟁만큼 중요합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들은 독립 노조 설립을 허락받았다. 올해 가장 기쁜 날이었다.

파급효과

2007년 징세노동자들이 파업 행동을 결의했을 때 이들이 속한 관영노조는 이에 반대했다. 징세노동자들은 관영노조를 무시하고 독립적 파업위원회를 조직했다.

징세노동자들은 임금 3백25퍼센트 인상을 쟁취하고 투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파업위원회를 해산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독립 노조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징세노동자들의 독립 노조 쟁취는, 2006년 가젤 엘마할라 방직공장 투쟁으로 부활한 이집트 노동운동 전체의 승리다. 마할라 노동자들이 승리한 후 이집트 전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나는 지난해 12월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징세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만약 징세노동자들이 독립노조 건설에 성공한다면 관영노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 정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독립 노조 건설은 폴란드, 한국, 남아프리카 등 옛 독재국가들의 변화를 촉발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내가 인터뷰한 노조 지도자는 징세노동자들의 사례가 다른 이집트 노동자들도 고무할 것이라 말했다. “이집트 경제는 ‘자유화’됐지만 노동자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곧 비슷한 움직임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제 독립 노조가 건설됐고, 더 많은 독립 노조 건설 요구가 있을 것이다. 무바라크!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 무바라크! 당신은 도미노 효과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연세대학교와 성공회대에 출강 중이며 인터넷 신문 〈레디앙〉을 비롯한 진보 성향 매체의 인기 필자다.
저서로는 《88만원 세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등 다수가 있다.



칼럼/논설

우석균 칼럼

진짜 무서운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모든 역병에 대해 그렇듯이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떠돈다. 그중 한가지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이다. 수파리 보건장관은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선진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건장관은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선진국들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이 빈국으로부터 바이러스 균주를 받아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비싸게 되파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2006년부터 조류독감 균주를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스부터 조류독감, 이번의 북미 독감 또는 신종 A형 인플루엔자(이하 IA)까지 계속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비책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백신을 준비하고 항바이러스치료제를 구입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럴 기술도 돈도 없다. 정작 필요한 지역보건의료체계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붕괴돼 있다. 그리고 그 치료제와 백신은 대기업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

이번의 IA 사태에서도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독점판매회사들인 로슈와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이다. 이들은 조류독감 등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다. 타미플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타미플루의 특허는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고 로슈가 가진 것은 그 판매권이 다. 2005년부터 3년 동안 로슈가 길리어드에 지불한 로열티만 11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길리어드의 전임 대표이사는 바로 미 국방부장관을 지낸 램스펠드다. 그는 국방부장관 재임 때도 길리어드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가 전 세계 미군에게 타미플루를 일괄지급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다. 여기에 조류독감 유행과 타미플루 사재기가 어느 정도 끝나서 로슈와 길리어드의 이익이 2008년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때마침 IA가 나타나서 또 다시 길리어드와 로슈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정말로 ‘제약회사 음모론’을 믿고

싶을 정도다.

지금 전 세계는 또다시 타미플루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타미플루의 약값은 천정부지다. 멕시코에서 타미플루 10알에 최근 1백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이번에 8백33억 원의 추계예산으로 타미플루 보유량을 2백50만 명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봤자 최소한 인구의 20퍼센트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라는 전 세계적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양의 절반밖에 안되고 지금은 살 수도 없다.

로슈·길리어드·램스펠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똑같은 성분이지만 인도의 시플라라는 제약회사가 생산한 안티플루라는 약은 타미플루보다 훨씬 싸서 지금도 5분의 1 가격이다. WTO 지적재산권협정의 예외로 돼있는 인도에서는 로슈의 특허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도제약회사의 약을 사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도 있다. 2005년 조류독감 유행 시기에 한국 정부는 이미 국내제약회사들에게 생산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때 16개 제약회사가 생산능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한 회사는 시제품까지 정부에 제출했다. 특허를 하늘처럼 만드는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는 공익적이거나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특허를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로슈나 길리어드에게 일정량(대략 3~4퍼센트)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한국의 제약회사에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을 허가하거나 이제 시간이 걸린다면 인도약을 수입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특허법 106조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해서 이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은 당장 한국 정부가 뜯어고치면 된다. 이미 중국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에 들어갔고 대만도 2005년에 그렇게 했으며 멕시코,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인도의 복제약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과 선진국 정부들 간의 특허권에 대한 동맹은 타미플루에서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백신의 특허에도 동일하다.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다. 치료약이 있음에도 매년 3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죽어야만 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로 매년 3백만 명이 죽는다. 에이즈 치료제의 특허를 가진 기업이 바로 로슈와 GSK가 포함된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IA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식품기업들의 공장식 가축사육방식으로 인한 변종 인플루엔자의 창궐 가능성과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무대책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진정한 원인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멕시코의 의료제도 붕괴다. 멕시코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원인은 바로 멕시코의 의료민영화 때문이다. 멕시코 국민 중 우리 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4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도 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건소만 이용할 수 있다. 오직 4퍼센트에 해당하는 특권층만이 메트라이프나 ING 등의 다국적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미국이나 멕시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립 병원의 의료혜택을 누린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NAFTA)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멕시코 의료제도가 나프타로 더 악화했다는 의미에서도 올바른 명칭이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거대기업들의 이윤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요구였다. 그러나 오늘날 IA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는 촛불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촛불 1주년인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한미, 한EU FTA를 통해 특허를 더욱 강화시키고 또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진정 무서운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이고 이명박 정부다. 따라서 박멸해야 할 것도 신종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는 회복될 것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도처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라고는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것뿐이다.

예컨대, 미국의 스탠다드앤푸어500지수는 올 3월부터 3분의 1이나 올랐다. 이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기 전에 2007년 8월 금융 위기가 폭발한 후 몇 달 동안 주가가 올랐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당시 두둑한 연봉을 받는 이런저런 열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세계경제 전망》은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생산이 1.3퍼센트 감소할 거라고 예상한다. “모든 점에서, 이번 경기 하락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 침체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막강한 공산품 수출국 중 하나인 일본은 올해 들어 3월까지 50억 파운드(9조 5천억 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1980년 이후 처음이다. 국제무역이 빠른 속도로 수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다른 주요 수출국인 독일의 경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6퍼센트다.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독일 재무장관은 2009~2010년에 약 1백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말했다.

다행히도 경제가 무한정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

다. 생산을 확장시키는 자기교정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중 하나가 기업이 보유중인 완제품 재고량이 다.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면 기업들은 상품을 팔 수가 없고 많은 양의 재고가 쌓인다. 그래서 그들은 재고가 팔릴 때까지 생산을 줄인다. 재고가 감소하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을 늘린다.

그러나 이런 메커니즘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지금 같은 심각한 불황 때에는 더 그렇다. 그래서 정부들이 감세, 외화 차입 확대, 재정 지출 증가 등 재정 자극책으로 수요를 늘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가 계급이 재정 자극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분열해 있기 때문이다. 한 강력한 자본가 분파는 — 국제적으로는 독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 정부의 외화 차입 증가로 정부 부채가 늘고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도 이 분파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은 새로운 “신 긴축 시대”를 천명하며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한다. 노팅힐[영국의 부유촌]과 이튼고교 출신의 애송이가 과연 긴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나 있을까.

그러나 이런 분열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IMF는 “실사 위기가 끝나더라도 지난 몇 년과 비교해 성장률이 훨씬 낮은 힘든 조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전망한다.

IMF의 4월 《세계경제 전망》에는 불황과 회복 과정에 대한 연구가 실려 있다. 두 가지가 특히 눈에 띈다. 먼저, “금융 위기와 결합된 불황은 다른 종류의 충격으로 촉발된 불황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 또, 내수 위축과 신용 경색 때문에 경기회복이 대체로 더디다.”

둘째, “다수의 나라들이 동시에 불황에 빠진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불황보다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경우 회복도 대체로 더디다.” 세계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져 있으면 수출 증대를 통한 회복이 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IMF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이런 사실을 현 상황에 적용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현재의 경기 하강은 동시다발적이고 심각한 금융 위기와 결합돼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지금의 경기 하강은 특히 심각하고 회복도 매우 더딜 것이다.”

다시 말해, 실사 세계경제의 하강이 중단되더라도, 장기간 저성장의 뒀에 걸리게 될 것 같다. 사람들이 1930년대를 대공황으로 부르듯이, 현 상황을 “대불황”으로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논설

이명박 정부의 극악한 탄압 이면에 있는 것

이명박 정권이 촛불 1년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2백21명을 연행했다. 검찰·경찰·노동부 등 억압적인 국가 기관이 이 폭력 진압을 진두 지휘했다.

5월 2일에는 아예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원천봉쇄는 5공 말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채택한 전술이었다. 대중 집회를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지배자들이 얼마나 촛불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폭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올까 봐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동의보다는 강제에 점점 더 의지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 유영환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거[국회 논의]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 하고 말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부드러운 장갑”이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그 개인의 돌출 연사가 아니다. 1930년대 대불황 이래 자본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부드러운 장갑”을 벗어던지고 더 자주 “철권”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철권” 행사가 사람들을 위축시켜 일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경제 위기에서 비롯하는 대중의 고통과 불만과 분노마저 없애지는 못한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하고 4·29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은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당황하고 있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상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한편 부자들은 돈방석에 앉아 있는가? 왜 국가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의 재산 증식에 더 관심을 갖는가?

그동안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은 자본주의만이 최상의 사회 운영 방식이며, 혼돈이나 전체주의 말고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없다고 설교해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체제에 불만이 있지만 지배자들의 대안 부재 설교를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에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배계급은 동의에 의한 지배를 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식”, 즉 지배계급의 사상에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대중은 신자유주의 붕괴 이후를 주목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일반적 찬양은 사라지고 새로운 대안이 백가쟁명으로 등장한다.”(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시사저널》 84호.)

국방부가 ‘불온’ 도서로 선정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이자 강력한 신자유주의 비판자인 장하준 교수의 강연에는 5백여 명이 몰려들었다. 반신자유주의적 주장만이 아니라 맑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맑스주의 경제학자 김수행 교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애초 대학원생 수업 교재였던 김수행 교수가 쓴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은 한 달에 10권 안팎으로 팔리던 것이 올해 들어 매달 2백여 권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체제 유지 사상이 도전받는 이때,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좌파는 이탈리아의 맑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전”이라고 불렀던 것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선 항의 운동 등 진보적 투쟁에 참가하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본질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이들과 함께 토론하며 체제의 진정한 본질을 들춰내고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상의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26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쌍용차 대량해고를 저지하고 일자리를 지켜내자

점거 파업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량해고에 맞서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4월 23일 교섭을 마지막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4월 24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쌍용차지부는 부분파업을 매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법정관리인 이유일은 “전체 종업원의 37퍼센트를 정리해고하는 계획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에 사측은 지난 몇 달 동안 일방적으로 강제 휴무를 시켜 온 야간조 노동자들에게 조업 복귀를 종용했다. 판매량 증가를 핑계대지만 이것은 파업을 앞두고 물량을 확보해 두려는 속셈일 것이다. 그래서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철회 없이는 주야간 근무 없다”며 사측의 야간 근무 협조를 거절했다.

사측은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에 관리직에 이어 생산직에서도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냈다. 또, 어버이날에 노동부에 대량해고를 신고할 것이다.

쌍용차지부 지도부는 좌절감에 빠진 일부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희망퇴직 반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 5월 7일 예정된 ‘쌍용차 전체 조합원 평택 공장 집결 투쟁’에서 모아질 조합원들의 분노를 즉각적인 점거 파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사측은 점거 파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호한 점거 파업과 생산직·사무직 단결로 대량해고를 철회시킨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뒤를 따라 당장 점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이간질



부분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

사진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단호한 점거 파업과
단결투쟁으로
대량해고를 철회시킨
대우버스 노동자들처럼
싸워야 한다.

시키며 점거 파업에 대비할 시간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사측이 점거 파업에 대비해 공장 굴뚝으로 가는 통로를 용접하고, 도장공장의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7백여 명의 용역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지부 현장조직인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전진하는 실천연대’가 주장하듯이 “옥쇄파업을 포함한 전면전 시행 시점은 정리해고 [노동부] 신고 시점”이

돼야 한다.

매일 벌어지는 부분파업과 교육에 대한 조합원 참가율이 거의 1백 퍼센트에 가까울만큼 열기가 높아지는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쌍용차

투쟁 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쌍용차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치적 성격의 투쟁이다.

실제로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쌍용차 구조조정 여부가 향후 GM대우는 물론 올해 현대·기아차 노사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금속노조 지도부가 6월 3~4일로 예정됐던 3만 명 금속 조합원 서울 상경투쟁을 6월 19~20일로 늦춘 것은 매우 아쉽다. 5월 중하순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고 민주노총도 6월 10일 ‘범국민항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가 투쟁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 등 금속노조의 기업지부 지도부들이 협상에 연연하며 금속노조 투쟁 일정을 늦추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현대·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쌍용차 투쟁에 대한 연대 파업 건설 준비에 나서는 게 금속노조의 주력부대다운 자세와 의무일 것이다. 이것은 이어질 구조조정의 표적이 될 현대·기아차 조합원 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다.

민주노총이 건설하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논리에 말려들지 말고 대량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지원하며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강철구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마지막 절규

“저들은 죽음을 강요하며 노예로 살라 한다”

“가슴 속 깊이 피눈물이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노조 탄압과 집단해고에 의해 죽음으로 몰린 화물연대 박종태 광주 지회장을 추모하는 글들이 다음 아고라에 줄을 잇고 있다.

수배생활을 하고 있던 고인은 동료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어터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던 회사 앞 야산 나무에 ‘노조 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목을 매 숨졌다.

악랄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 이명박 정부와 대한통운 사측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공범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운동의 한복판에서 영웅적인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를 눈엣가시로 여겼고, 화주들은 파업 당시 약속한 운송료 인상 합의를 파기하면서 노조 탄압에 열을 올렸다.

고인이 근무하던 대한통운도 화물연대 가입금지 등의 각서를 강요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하면서 공격에 앞장서 왔다.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수수료 인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이에 항의하는 화물연대 조합원 78명을 집단해고했다.

대한통운 금호지사에서조차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졌다. 사측은 운송료 인상을 못 지키겠다고며 거꾸로 조합간부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의 조치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은 7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다.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밤 9시~11시까지 하루 꼬박 일하면서도, 쫓돌리는 생계 걱정에 시달려 왔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하다못해 고객의 거주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전화요금도 노동자들의 몫이다.

전 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산재율, 무려 6배에 달하는 산재 사망률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집약케 한다. 이들은 산재보험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할 뿐 아니라 노조설립 필증을 회수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화물운수 노동자들을 포함해 레미콘, 학습지교사, 쿼 서비스, 간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그래서 고인은 유서에서 “극우보수 팔통들이 이번 참에 아예 지네들 세상으로 바꿔 버릴려고 ...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또 “공권력의 잔인함은 허를 내두를 정도”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 속에 희망은 보이지



이명박과 대한통운이 박종태 지회장을 죽였다.

않[는다]”고 절망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과 ‘고 박종태 열사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과 12일에 대한통운 대전지사와 광주지사 앞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 지회장의 사망을 “대한통운 자본과 경찰의 탄압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 탄압과 대량해고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더는 절망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길거리로 내몰린 동지들이 정당당당하게 회사에 들어가 우렁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고인의 유서 중) 강력한 투쟁과 연대가 필요하다.

박설

레프트21 5호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레프트21〉은 정부의 보조금은 물론이고, 영리기업의 광고를 일절 거부합니다. 〈레프트21〉이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과 체제의 더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이는 단 한 부의 신문도 발행할 수 없는 자본주의에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진보언론들조차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기업 광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레프트21〉은 독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에만 의존한다 보니,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신문 판매 수입은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며 신문 인쇄와 발송에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호 수백만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가치들을 비롯한 신문사 상근자들 대부분이 상근비는커녕 한 톨의 출퇴근 교통비, 식사비조차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독자들의 신문 구독료 부담을 줄이려는 애초 계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못내 아쉽지만, 신문사의 유지·운영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

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5호부터 한 호당 1천8백 원(1년 구독비 5만 원)으로 **신문구독료를** 인상하려 합니다.

이 정도 인상으로도 당분간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재정 상황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광고나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독자들의 구독료에만 의존해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본지의 원칙과 신문의 정보량(매호 원고지 400~450매이며, 이는 중면 소설 분량입니다) 등을 참작해, 구독료가 오르더라도 본지에 대한 애정을 변함없이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들은 종전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후원회원이 돼 주시거나 구독료 인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구독료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충실한 내용과 노력으로 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상된 구독료 안내 (5호부터 적용)
한 부 1,800원
정기구독 1년 5만 원 / 2년 10만 원

레프트21 후원회원이 돼 주십시오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동자·서민들이 월급을 꼬개 후원회비를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프트21〉과 같은 좌파 언론은 한두 명의 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인류의 해방을 염원하는 이들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수록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고무하고 대안을 주장하는 〈레프트21〉과 같은 좌파 신문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프트21〉은 투쟁하는 노동자, 수탈당하는 사람들,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순도 1백 퍼센트 반자본주의 신문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창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의 후원회원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으로 〈레프트21〉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진정한 대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은 주위의 〈레프트21〉 판매자, 전화 02-777-2792, 웹사이트 <http://www.left21.com>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